보도 참고자료 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2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순 서

Ⅰ. 국정과제 현황 1

Ⅱ. 국정과제 추진계획 9

국정목표1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11

국정목표2 : 맞춤형 고용 복지 67

국정목표3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105

국정목표4 : 안전과 통합의 사회 129

국정목표5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177

추진기반 : 신뢰받는 정부 205

Ⅰ. 국정과제 현황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전략		국정과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
	2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3	산 학 연 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4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7	세계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8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9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10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11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12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13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14	수산의 미래 산업화
	15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16	고령 친화산업 육성
	17	물류 해양 교통체계 선진화
	18	해외건설 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19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20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21	창업 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2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23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24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25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27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체계 선진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29	소비자 권익보호
	30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31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32	기업지배구조 개선
	3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3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전략	국정과제	
	35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36	부동산 시장 안정화
	37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38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39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40	건전 재정기조 정착
	41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국정목표 2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42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43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44	건강한 가정 만들기
	45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46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47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48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49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 증진
	50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
	51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52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53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54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55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56	주거안정 대책 강화
	57	서민 금융부담 완화
	58	교육비 부담 경감
	59	통신비 부담 낮추기
	60	농어가 소득 증대
	61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62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63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64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65	행복한 임신과 출산
	66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67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68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국정목표 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전략	국정과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69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70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71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72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7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74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75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76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77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78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79	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80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81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82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국정목표 4 안전과 통합의 사회

전략	국정과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83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84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85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8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87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 발달지원
	88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89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
	90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91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92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93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94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95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96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97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전략	국정과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98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99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100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10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102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103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104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105	자원 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106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107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108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109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강화
	110	사회 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1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112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113	지방대학 지원 확대
	114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115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116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국정목표 5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전략	국정과제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117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118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119	한미군사동맹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120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121	보람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122	명예로운 보훈
	123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12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125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126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127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128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의 조화 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129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130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131	재외국민 안전 권익 보호와 공공외교 일자리 외교 확대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133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추진 기반 신뢰받는 정부

전략	국정과제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135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136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138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139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140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Ⅱ. 국정과제 추진계획

국정목표 1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전략 1 ····· 13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추진전략 2 ····· 2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추진전략 3 ····· 35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추진전략 4 ····· 43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추진전략 5 ····· 49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추진전략 6 ····· 57
성장을 뒷받침 하는 경제운영

추진전략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

(2)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3) 산 학 연 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4)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7)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8)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9)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10)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가. 과제개요

□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하여, 산업을 창출하고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등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

나. 주요 추진계획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술지식 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R&D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섭하는 **생태계 창조형 R&D** 로 변경

* 연구개발 또는 기존 기술의 발굴,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인프라, 제도개선·규제완화, 공공구매 연계 등까지 포함

과학기술과 아이디어 상상력을 융합한 신산업 창출

○ **(신성장동력)**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예측으로 유망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문화컨텐츠SW 인문 예술**과 융합

○ **(사회이슈해결)** 고령화 에너지 등의 국가당면 이슈를 해결하고, 사회복지 안전 등 **공공시스템과 연계**한 시장 창출 지원

○ **(실용기술 활용)** 사업화 창업 **아이디어와 기술 보유자, 투자자**를 매칭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R&D와 공공구매 연계 등 지원

○ **(과학기술 서비스)** 빅데이터 초고성능컴퓨팅 등을 활용한 공공 민간 서비스 확대와 이를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등

○ **(거대 전략기술 기반산업)**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대형 가속기, 원자력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 민간 개방으로 산업생태계 구축

(과학기술 국제화)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원외교, 과학기술 ODA 등을 통한 과학한류와 해외일자리 창출

- 지구촌 기술나눔 센터(국내)와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현지)를 구축,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연결

2	IT 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가. 과제개요

□ IT,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성장정체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 제조경쟁력(美 경쟁력委, 位) : ('10) 3 → ('12) 6

○ **유망 융합신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한편 **업종간 융합 성공모델**(수익모델) **확산**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모멘텀과 일자리 창출** 추진

나. 주요 추진계획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주력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형 성장 환경을 조성**

○ 기존 지식서비스 관련 연구소·지원기관들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계 조정함으로써, **'지식+제조업' 융합의 본격 확산** 지원

- R&BD 주기에 걸쳐 **디자이너, 스마트콘텐츠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산업기술 R&D 기획 평가 체제'**를 개편

○ 다양한 기업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 소통하여 **융합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산업융합포럼**('12.12월 창립)' 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수익모델을 발굴** 확산

소재 부품, 뿌리산업분야(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융합** 확산을 위해 시스템반도체(전력반도체)· 첨단센서 등 **차세대 HW 기술개발** 및 나노소재, SW융합 부품 등 **시장선도 '핵심 소재 부품'** 개발

○ 소재 부품기업 대상으로 SW적인 경영진단, 공정혁신, 마케팅 전략 등을 제공하여 **뿌리산업의 작업환경 고도화** 추진

항공전자, 랜딩기어 등 항공산업 **핵심부품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및 **C(탄소)-소재의 독자 기술력 생산능력** 확보 → **신산업 창출**

3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가. 과제개요

□ 지역 대학산업연구소와 지자체를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융합 공동체로 육성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생태계 조성

나. 주요 추진계획

산학연 협력 패러다임을 **창업과 신산업 창출 로 전환**

○ 산학연협력 총괄기구로서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기능재편과 전문인력(변리사 등) 충원 지원 확대

○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대학 창업생태계 조성**

○ 교수, 출연(연) 연구원의 **기술창업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출연(연)은 **산학 협력 매개와 중소기업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 **학연 교수제** 와 **학연 학생**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고, 출연금 중 일정비율(5~15%)은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토록 의무화**

과학기술-인재-산업을 연계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체제 정비**

○ 분산다기화된 지역 과학기술 지원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체계** 구축(과학기술기본법 개정 검토)

○ 중앙정부 중심 지원에서 탈피, **지자체 스스로 지역내 산학연 자원과 기술혁신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 육성

지역별로 특성화된 **창업생태계 조성**

○ **과기특성화대학**은 과학벨트연구개발특구 제도와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전진기지**의 **선도모델**로 육성

○ **지역별 거점대학**을 지역 출연(연)과 연계 운영을 통해 지역산업 기술 공급처로 육성

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기반 구축

가. 과제개요

□ 유망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 등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부가가치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확대

ㅇ 제조업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 성장동력을 견인

나. 주요 추진계획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서비스산업 행정지원 체제 구축, 지원근거 마련,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

(서비스산업발전 장단기 계획 수립)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5개년계획 등 장단기 계획 수립

(유망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해 산업별 집중육성대책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연결

ㅇ 특히 **유사 또는 이종 서비스간 결합, 융합** 등 서비스 분야에서 창조적 고부가가치화 추진

* IT・S/W, 연구개발(R&D) 서비스업,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 문화・콘텐츠 분야, 사회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허브화 추진)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기로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의료관광교육MICE(Meeting · Incentives · Convention · Exhibition) R&D 등 서비스허브화 추진

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가. 과제개요

□ 자본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규율** 확립

나. 주요 추진계획

(기업금융기능 강화)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 등을 위한 **선진형 투자은행(IB)** 육성, 조건부자본증권* 허용 등 **기업자금조달수단 다양화**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전환, 원리금상환 감면 등이 부여된 사채

(투자자보호 강화) 개인의 합리적 투자를 위하여 투자자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1]하는 한편, **사전교육**을 **활성화**하여 투자역량 제고 및 **투자자 피해시 사후구제** 강화[2]

1) 공시정보 확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투자유의사항 정보제공 확대 등
2) 소액사건 분쟁조정 진행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금지 등 분쟁조정제도 개선

(불공정거래규제 강화)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기능 확대 등 강제조사**를 **강화**하고, **과징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유인** 최소화 도모

(거래소 발전) 자본시장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개선**[1]하는 한편, **시장별 특성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기능 제고[2]

1)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 증권시장 대체거래시스템 등 도입
2) 코넥스 신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진입·유지 부담 완화 등

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가. 과제개요

□ 높은 **고용창출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유통산업 외국인투자** 등을 **일자리창출 주역으로 육성**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외국인투자U턴투자** 활성화, **산업R&D 사업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주요 추진계획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대기업·협력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기술력 제고, 임금격차**(대기업의 51.9% 수준) **해소**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동반성장 확산·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2·3차 협력사 대금 지급 모니터링시스템 보급,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확대**(1차 협력사 포함)

○ **성과공유제* 도입확인 기업을 지속 확대**('12년 77개 → ' 13년 100개)하며, 중견·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

* 성과공유제 : 대기업·협력업체간에 사전 약속에 따라 공동의 개선활동(R&D, 시장개척, 공정개선 등)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약정된 방식(단가보장, 장기구매약정, 비용보전 등)으로 공유하는 협력활동

○ 대기업 비영리재단, 소셜벤처 등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을 활성화**하여 기업경영 사회적 기여 일자리 창출을 연계

(투자 유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

○ **U턴기업 지원 법적근거 마련, U턴 유망업종** 전용산단 조성, 공동 R&D센터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집단U턴 유치**

○ 각 **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업종별 **산업특화클러스터** 조성

○ 기존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외에 **금융상품으로 투자유형을 다양화**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

(선도자형 산업 R&D 및 사업화) 소재장비시스템제품 생산기업이 공동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사슬**(Network형)을 만드는 R&D 프로젝트 발굴 지원 및 **기술사업화기술금융 활성화**

7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가. 과제개요

□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축소, 산업 위축 규제 개선 및 인터넷 신산업 육성으로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ㅇ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통신심의 축소, 분쟁조정 기능 강화 및 규제 실태조사를 통한 산업 위축 규제 개선 등 추진

나. 주요 추진계획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는 대폭 축소하되,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보완

ㅇ 임시조치* 남용에 의한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권 신설, 임시조치 후 처리절차 마련 등)

*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 글을 안보이도록 하는 제도

ㅇ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구축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역할을 확대하여 자율심의 기능 강화

(인터넷 신산업 육성)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및 ICT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창출

ㅇ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처리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을 통하여 기반 조성

(산업 위축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 인터넷 관련 규제법령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 폐지 등 개선

ㅇ 인터넷 관련 규제는 다양한 부처 소관법률에 존재함을 감안, 규제개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선 추진

8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가. 과제개요

□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 지원과 창직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

나. 주요 추진계획

(K-Move)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을 구축, 열정잠재력 있는 청년을 선발하여 전문가 멘토링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재로 양성한 후, 해외진출 지원

○ K-MOVE 포탈 구축운영을 통한 현지 일자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통해 원스톱 종합서비스 제공

○ 해외취업장려금제도 를 통한 현지 정착 지원과 해외 벤처 캐피탈의 국내 지원 및 로스쿨생 등의 해외 법률분야 취업 지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직 활성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

○ 자치단체-지역대학-지역기업 등이 연계추진하는 우리지역 키우는 창직사업 신설 및 창직인턴제 확대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 교원, 경찰, 소방, 복지, 고용분야 일자리의 단계적 확대 및 청년 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9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가. 과제개요

□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친화적 사업 활성화 및 **고용률 70% 달성 지원**

나. 주요 추진계획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활용도 제고)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사전 고용영향평가 도입** 등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에 적극 활용**

○ 단위사업 중심에서 **산업별·정책분야별 평가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일자리 컨트롤 타워로서 **'(가칭) 국민일자리행복회의' 정기 개최**

*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청사진인 「국민 일자리 행복 로드맵」 수립·추진

○ **일자리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쌍방향적 의사소통 체계 구축, 매월 지역·산업별 경기·고용동향 점검

○ **민관 일자리협의회**를 통해 공공 및 경제 5단체간 경제·산업 동향과 고용창출에 관한 인식 공유·협력

(고용영향평가의 인프라 강화) 체계적인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고용·노동통계 기능 강화** 및 **관련 인프라 보강**

*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정밀조사 및 심층분석 등

10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가. 과제개요

□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따뜻한 성장' 과 '국민행복' 실현

나. 주요 추진계획

(협동조합 비전 및 정책 수립) 협동조합 발전 기본계획('14~' 16년) 수립 및 **기존 일자리, 복지정책과 연계성 제고 정책 과제 발굴**

○ 법 시행후 실태조사를 통해 **'협동조합 장기정책 비전'** 수립

(협동조합 인프라 지원)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정책지원 강화**

○ **권역별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조합설립, 인가, 감독업무 등 지원

○ **온라인 설립 신고 및 인가, 경영자료 공시 및 통계 DB구축** 등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사회적기업 활동 지원) 사회적기업 **활동범위 확대 및 인증제 개선**

○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목적 판단기준' 보완** 등 제도개선 (예: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 등)

○ 인건비 직접지원은 단계적 축소, **사업개발· 판로개척 등 간접지원 확대** 및 **성과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업 지원 강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 활성화, 농어촌 지역개발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청년고령자의 사회적기업 취업창업 지원 강화**(예: 청년 사회적기업 인턴제, 은퇴자 창업전문과정 개설 등)

추진전략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11)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12)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13)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14) 수산의 미래 산업화

(15)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16) 고령 친화산업 육성

(17) 물류 해양 교통체계 선진화

(18) 해외건설 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11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가. 과제개요

□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나. 주요 추진계획

(네트워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세계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현재 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고,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 인터넷존(Wi-Fi존) 대폭 확충

(HW/SW) ICT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ICT 중소벤처의 창업과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기술이 해외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 확보 추진

(플랫폼)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대응하여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맞춤형·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 육성으로 신규 미디어시장 창출

(콘텐츠) 게임, 음악,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5대 글로벌 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등 추진

12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가. 과제개요

□ 시장개방 확대, 사회·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응, 농림축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

나. 주요 추진계획

(농식품의 6차산업화) 생산과 연계, 유통·가공·외식·관광 등 2·3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촌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

○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로 **가공·향토산업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관광·체험 등 3차 산업화하여 **농촌 관광·체험 활성화**

(농식품의 첨단산업화) 종자, 식품, 기자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농식품을 최첨단산업으로** 육성

○ **종자강국** 도약을 위해 Golden Seed 프로젝트, 육종연구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로열티 절감 추진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분뇨문제 해결 및 생산체계 개선 등을 통한 **축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추진

○ **가축분뇨 자원화, 무허가축사 개선, 시설현대화 지원, 장단기 사료가격 안정대책** 및 **가축질병 대응체계 강화** 등 추진

(산림부국 실현) 숲 가꾸기, 목재산업 육성, 산림복지 공간 및 도시숲 확충,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등으로 **산림가치 극대화**

13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가. 과제개요

□ 체계적 해양관리를 통해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해외 **해양경제 영역 개척, 해양신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 창출

나. 주요 추진계획

(해양신산업 육성) 마리나 시설 확충 등 **해양관광 기반을 확대**하고, **산업연계형 R&D 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 도모

○ 마리나 체험행사 확대를 통한 **해양레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마리나 시설 확충,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 등 **마리나 산업 활성화**

○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플랜트, 수자원 등 **해양R&D를 지속 추진**하되,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경제영토개척) 남북극을 아우른 **극지정책, 심해저** 광구확보 추진

○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 **북극** 항로개척 및 **극지**에서의 **기초응용 연구 확대** 등 극지에 대한 전략적 개발활용 추진

○ **유망 탐사개발광구 확대** 및 선진국 수준의 **상용화 기술개발**

(해양관리) 주변국 동향에 적극 대응하고, 경계획정 지원 강화

○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관측과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해경 대형 함정 확충, 해경전진기지 개발 등 체계적인 해양관리 추진

14	수산의 미래산업화

가. 과제개요

□ 피쉬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나. 주요 추진계획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첨단기술 접목 및 신개념 도입으로 전 세계적 **수산양식혁명을 선도**하고, 외연 확대로 **수산업 영역 확장**

○ **유망품목에 R&D를 집중하고,** 대단위 양식단지(**양식섬**), 먼 바다 **외해양식**, 도심형 **빌딩양식**, **갯벌양식** 등 신개념 생산 시스템 확립

○ **바다생태관광·레저·스포츠** 등으로 수산업의 외연 확장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수산자원 증강, 적정 어선세력 유지 및 해외개발역량 강화 등으로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체계 구축**

○ **바다목장·바다숲·종묘방류** 등 자원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절감형·복지형 어선** 개발·보급 및 **노후어선 현대화** 추진

(어항 기능 고도화) 기능 융복합, 개발방식 다변화, 시설 개보수 및 관리강화 등으로 **어항의 효용성 극대화**

○ **맞춤형 특화어항** 개발, 민자투자 활성화, **어항안전 보강** 등 추진

(수산 식품산업 육성) 인프라 강화, 제도 개편 및 지원 강화로 **수산물 소비패턴을 다양화**하고 **수출확대**에도 기여

○ **수산식품 가공·소비지물류 센터 확충, 천일염의 세계화** 등 추진

15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가. 과제개요

□ **창조경제 이행**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나. 주요 추진계획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 **'글로벌 제약육성 펀드'** 조성, 제약산업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추가 지정, 기술투자 중심 전환을 위한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추진

(첨단의료기기, 화장품 산업육성) 융복합 신의료기기 **R&D 강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정 및 **특성화 대학원** 설립, 화장품 산업 **첨단 수출 산업화**

(신 의료융합서비스 발전 기반 조성) **국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의료정보 공유보호 제도 정비, 융복합 서비스**(U-health, PHR) 등 **시범사업** 추진

(전략적 보건의료 R&D 강화) **보건의료 R&D 기본계획 수립** 및 **부가가치 높은 첨단의료기술 개발** 분야* 집중 투자, **연구중심병원** 육성

* 맞춤의료, 줄기세포·재생의료, 신약·의료기기, 양한방 융합 등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중증장기 환자** 유치를 위한 **유치채널 다양화, 복합 헬스케어 타운 조성 지원, 해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의료수출 촉진)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의료법인 해외 투자 기반 및 병원수출 전문기관** 설립육성

(한의약 세계화) 국제특허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전통지식 체계화, 한의약 해외 거점 마련 등 추진

16	고령 친화산업 육성

가. 과제개요

□ 고령화에 대응하여 건강 증진 웰빙 등 친고령산업 및 항노화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 (글로벌 항노화 시장) '10년 237조→ '15년 365조원 전망
(국내 항노화 시장) '11년 11.9조*→ '20년 28.3조 전망

나. 주요 추진계획

(산업화 가능분야 개발) 항노화 화장품·의약품·식품,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서비스, IT기반 스마트케어** 기술 개발, **항노화 특화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

(친고령 항노화산업 R&D 확대) 범부처 **'고령화 시대 고령친화 항노화 산업 Flagship프로젝트'** 추진, R&D 지원 확대*

* 복지수요대응(자동수욕시스템, 고령자 테크노하우스, 신체기능대체물, 건강관리 등), 미래수요창출(인공지능 스마트신발, 고령생활지원 Health IT 시스템) 분야 지원

(융·복합 R&D 촉진 여건마련) 친고령산업 연구지원센터* (예: World Aging Center) **건립, 관련 펀드 조성**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자격제도 도입** 및 **국제행사** ** **유치** 추진

* 분야별 글로벌 시장진출 Hub화, 융복합 신기술 및 다학제적 정책개발, 인력양성 (ODA 포함), R&D, 인큐베이팅, 시장활성화 등 지원

** 제3차 UN 세계고령화총회 등 정상급 국제행사 유치 ('15) 추진

(관련 법·제도 정비) '친고령 항노화산업 활성화 T/F' 구성, **산업 발전 중장기 로드맵** 및 항노화 산업 **연구·육성** 기반 마련

* 친고령 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요양 급여 제품 수 및 급여 대상자 확대 병행

17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가. 과제개요

□ **간선대중교통체계** 개선과 **물류해운교통 신산업 육성** 등으로 교통물류해양 체계 및 산업 선진화

ㅇ 기존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원체계 등을 정비하여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나. 주요 추진계획

(교통체계) 혼잡한 **간선교통망과 도시권 철도도로망**을 개선하고 **교통 수요관리** 및 **대중교통 체계 선진화** 추진

ㅇ 철도 **병목구간**을 개선하고 **혼잡권역 고속도로망** 확충

ㅇ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도시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 확대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구축 추진 및 광역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

ㅇ 대중교통 **노선요금체계**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합리화**

(해운물류) **해운물류산업**에 지원* 강화 및 **국적 크루즈** 육성, **다기능 항만클러스터** 조성, **선박관리산업** 육성 등 추진

* 해운보증 강화, 화주-물류기업 직접연결 등 제3자 물류기업 지원 추진 등

(해양개발체계) 해양생명자원 발굴, 자원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해양개발을 체계화**하고, 심층수 이용범위 확대 등 **경제적 이용확산**과 연계

18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가. 과제개요

□ 해외건설·플랜트, 원자력발전소 등 **건설·원전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ㅇ 시장공종 다변화, 지역별 수출전략 등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 발주제도 개선 등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나. 주요 추진계획

(해외건설 기반마련)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패키지형 수출, 해외건설 R&D** 등 추진

ㅇ 아프리카·중남미 등 **새로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정부 주도로 진행된 **한국형 국토·SOC 개발경험 수출** 노력

ㅇ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국내 건설제도 선진화) 해외건설의 토대가 되는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공사 입찰방식 및 건설기능인 처우 개선 추진

(원전플랜트 수주 확대) 국가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수주활동**도 적극 지원

ㅇ 대기업이 주도하는 플랜트수출 이외에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기자재 틈새시장 진출** 역량 확대

- 원전운영, 정비, 계속운전 등 서비스기술시장에도 적극대응

* '13년 중 UAE 원전운영/정비지원계약 체결 추진

ㅇ **미자립기술 국산화**로 도입국의 기술이전 수요에 대응하고 원전 건설·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적기확보**

추진전략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19)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20)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21) 창업 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22)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23)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19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가. 과제개요

□ 중소기업중견기업 정책연계를 강화,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 중견- 대기업' 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여 **우리경제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

나. 주요 추진계획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 출연연구소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도입, 정부 기술개발 결과물 **중소기업 우선이전 법제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력을 선진국의 90%, 생산성은 대기업의 60%**로 향상

○ **(수출 및 판로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단계별(준비- 실행- 현지진출) 맞춤형 지원 강화, 강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 도입

-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 대규모 계약의 **분할분리발주** 법제화,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초기시장 제공

○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 중소기업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제도 도입**, 병역특례제도 개선 등을 추진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마련) 중소기업 졸업 후 금융세제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업상속 지원 강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

(정책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 마련 및 정책홍보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개편

20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가. 과제개요

□ **수출비중이 33%**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시장에 눈을 돌리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11년 **무역 1조달러** 달성, **수출 7강** 진입 등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 **대기업특정 품목 편중, 가격경쟁력 위주 수출**로 **성장한계 직면**

* 수출편중도('12): 주력 5대 품목(반도체, 자동차 등) 41.1%, 13대 품목 80%

○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 선진국보다 **미흡한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중국 등 신흥국 추격** 등으로 **'샌드위치 경제' 화**

* 해외생산비중 : 휴대폰 81%('12.3분기 삼성·LG 등), 자동차 51%('12년 현대·기아)

□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제고, 품목 다변화**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원기관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업종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수요대응형 수출지원체계 구축**

나. 주요 추진계획

(중소·중견기업 역량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기업의 글로벌화 역량평가와 수출단계(준비-실행-현지진출)별 **정책수요에 맞춘 수출지원 패키지**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역전문가 양성**

(신흥시장 마케팅 지원 및 인프라 강화) 해외시장에서 **문화한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결합한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 추진 및 **수출지원 인프라**(해외전시회, 무역관, 무역보험 등) 확충

(총력 수출지원체계 구축) 지역별 **원스톱 수출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전략회의** 개최 등을 통해 수출애로 해소

*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을 위해 KOTRA는 국내역할 강화, 중진공은 해외IBI 진출강화

21	창업 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가. 과제개요

□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조적 인재들이 도전하여 성공**하는 영웅 신화를 창출

나. 주요 추진계획

창조형 중소기업 창출

○ **(우수한 청년창업가 발굴 양성)**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 강화, 창업선도대학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의 희망 창업기지화를 추진**하고, 벤처 천억기업 등 성공사례를 홍보하여 **젊은층의 도전정신을 고취**

○ **(투자중심 자금조달체계 마련) 청년창업펀드 신설, 크라우드 펀딩*** 및 보육 투자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여 성장시키는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 을 도입하여 기술과 아이디어로 쉽게 자금조달 지원

* 일반국민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하여 창업에 투자

○ **(중간회수시장 확충 및 코스닥시장 개편)**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 확충,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M&A 세제지원 및 **코스닥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 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조기회수 통로 마련**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을 통한 실패경험의 사회적 자산화

○ 실패해도 생계는 유지토록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간이회생제도'** 를 도입하여 회생기간을 단축

○ 실패 기업인이 **과거 납부한 세금실적을 반영**하여 체납된 세금의 납부유예 또는 재창업시 소득세 법인세 일부 감면 추진

22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가. 과제개요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보호와 자생력 제고**를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생업안전망 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

나. 주요 추진계획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 (1단계 : 진입) **상권정보시스템***의 **상권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협회, 소상공인 창업학교**를 통해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

* 전국 1,200개 주요상권의 동종·경쟁업소, 임대시세, 유동인구 등 정보 제공

○ (2단계 : 진입 후) **사업보호와 경영역량을 강화**

-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조기 정착, **사업조정 일시정지 명령제 도입** 등을 통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억제
- **협동조합 결성을 통한 공동구매**, 지역별 유통물류센터 건립 확대 등을 통해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
-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기금** 설치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종합적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 (3단계 : 실패) **업종전환 전직교육**을 강화하고, 폐업시 압류걱정 없이 생계유지 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공제기금 조성 확대**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 상인조직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다량 염가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정부 비축물자 지원**을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

○ 지역 역사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인증제도 도입**, 시설현대화사업 상인부담 완화 등 추진

○ **온누리상품권을 5년간 4조원을 발행**하고, 지자체 공무원도 **복지비의 10%**(400억원)**를 구매**, 주차장 택배시스템 카드단말기 보급 확대

23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가. 과제개요

□ **교통 운송 산업을 지원**하고, **교통산업 구조를 선진화**

○ 택시, 버스, 화물차, 연안여객운송 등 영세 운송업을 지원하고, 교통·운송 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

나. 주요 추진계획

(**택시지원**) 택시문제의 근본요인인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연료다변화 지원 등으로 **경영수지 개선 및 경쟁력 제고**

○ 택시총량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감차보상**과 CNG 등 **차량연료 다변화를 위한 국가 지원 추진**

(**버스산업 선진화**) 정기이용권버스 등 수요응답형 서비스 도입, 광역급행버스 확대, 승차권 발매 통합전산화 등 경쟁력 강화

(**화물 운송업 지원**) 통행료 할인 검토 및 **검사수수료 절감을** 추진하고, **복지사업** 및 휴게시설 확충 등 **근로여건 개선**

○ **표준계약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연안여객운송사업 선진화**) 도서교통 육성 법률 제정, 국가고속 해상교통망(KVX)구축, **해상교통인프라 개선 등 도서교통 육성**

추진전략 4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24)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25)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27)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체계 선진화

24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가. 과제개요

□ 기술과 지식, 아이디어가 활발히 창출되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제고

나. 주요 추진계획

창의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회문화와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

○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과 전국 과학관 무한상상실 설치 등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씨앗이 퍼지도록 과학문화 활동 다변화

○ 과학기술 특성화대 융합교육 프로그램 지원, 과학고·영재고의 교육·연구 지원을 통한 과학영재 체계적 육성 등

국가R&D **투자규모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 정비**

○ 정부의 투자는 **기초연구**에 집중('17년까지 전체투자 중 40%)하고, 연계·사업화연구와 중소·중견기업R&D에 대한 지원 강화

○ 민간 R&D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기술규제 완화 추진

창의적 성과 도출을 위해 **R&D기획·평가 및 관리 시스템 개편**

○ 최종목표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구자가 자율 기획하는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학술성과 중심 평가에서 기술이전 등 사업특성에 따른 다양한 가치를 평가요소로 반영

○ 정부R&D성과정보 시스템 구축과 후속연구 지원 등 성과활용 강화

과학기술인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출연(연)별 미션 재정립과 중장기 비전수립, 출연금 지원비중 확대('14년 70%)와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정규직 확대 추진

○ 과기인 연금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높이고, 65세 정년 환원 검토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인프라 강화**

○ 창조경제 구현 위해 과기기본법 범위를 혁신생태계까지 확장

○ 과기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위해 부처별 추진계획(5년) 수립

25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가. 과제개요

□ 발사체, 인공위성, 달 탐사 등 최첨단 집약기술인 우주기술의 자립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구현

나. 주요 추진계획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한 인공위성 자력발사 능력 확보

ㅇ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km ~ 800km)에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발사체 개발(당초 '21→ '19)

ㅇ 한국형발사체를 활용,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 자력발사('20)

인공위성 개발로 국가안전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

ㅇ 한반도 주변의 기상, 해양, 환경, 재해재난, 자원 등 상시관측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 구현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

ㅇ 한국형발사체는 시스템 예비설계 단계부터 항공우주연구원과 기업체가 공동 추진하여 우주산업 촉진

ㅇ 차세대 중형위성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창출, 위성전문 기업 육성, 세계 위성체 · 위성영상 시장 진입 등 도모

ㅇ 국내 위성영상 판매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위성영상 수신 · 활용 등 위성활용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우주 국제협력 강화로 우주개발 촉진 및 국가위상 제고

ㅇ 대상국 수준과 특성을 분석하여 협력을 다변화하고, 높아진 우주 개발 역량에 걸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ㅇ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형 국제공동연구 사업 등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 참여 확대

2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가. 과제개요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하여 기초과학부터 첨단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나. 주요 추진계획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 연계로 **전주기 R&D 지원 체계 구축**

ㅇ 그간 분산 추진되어온 정부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기초과학에서 연구성과의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

ㅇ 현지 전담 지원조직을 일원화하고, 과학벨트특구 내 연구기관의 **성과 발굴·확산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과학벨트를 **과학·문화·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생태계**로 조성

ㅇ 기초과학연구원은 인근 **대학·연구소, 기업체와의 소통과 융합**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건립

ㅇ 유치한 과학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문화·의료·교육 등) 조성

기능지구(청원·천안·세종)의 **과학-비즈니스 연계역량** 강화

ㅇ 기능지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거점지구와의 연계전략을 차별화

ㅇ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지역별 역량 육성 및 기반 마련

기초과학연구원을 **창의인재와 원천지식의 중심기관**으로 육성

ㅇ 국내 보유 역량과 국가 전략적 차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연구 분야 구성에 관한 계획** 수립

ㅇ 각 캠퍼스는 **지역별 특성화된 기초연구 거점**으로 조성

27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가. 과제개요

□ 지식재산이 효율적으로 **"창출-보호-활용"** 될 수 있는 **지식재산(IP) 시장생태계** 조기 구축

나. 주요 추진계획

IP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등 지식재산 활용 극대화

ㅇ 연구개발-표준-특허 간 **삼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성이 큰 고부가가치 **원천 표준 특허**의 **전략적 확보** 방안을 마련

ㅇ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독자 산업 반영 등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대응 강화**

ㅇ 신속전문화된 분쟁해결을 위해 **특허소송 관할제도 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ㅇ 디지털 포렌식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수사기술 고도화** 및 **특사경 등 수사인력 전문성** 제고,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

ㅇ **해외 지원센터** 연계 확충 및 **국제협력***을 통한 **침해방지 및 권리구제** 지원

중소 중견기업 지재권분쟁 대응역량 강화

ㅇ **중소 중견기업**의 **지재권 관리역량** 제고를 통한 **선제적 분쟁예방** 지원

ㅇ 국제지재권 분쟁 단계별(평시-경고-대응) **범정부적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및 국민인식 제고**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혁신과 창의 촉진

추진전략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29) 소비자 권익보호

(30)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31)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32) 기업지배구조 개선

(3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28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가. 과제개요

□ 대기업의 **경제력 우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행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범**으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

나. 주요 추진계획

유통분야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거래관행 조사 제재

ㅇ 납품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복잡다단한 **판매장려금 항목 정비·개선**

ㅇ 판촉사원 파견의 요건을 명시한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ㅇ 각종 비용의 합리적 분담기준 제시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가맹점주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실태조사 등 강화

ㅇ 가맹본부의 **매장 리뉴얼 강요금지**와 리뉴얼 **비용분담**(최대 40%)

ㅇ 가맹점주의 단체 결성·가입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이익 부과 금지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 방지

ㅇ 「하도급법」에 부당한 특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 신설

ㅇ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방안을 추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ㅇ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의 **공정거래협약 체결** 유도·확산

*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간 거래내용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 2·3차 협력사까지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및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의 실효성 제고**

ㅇ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조속 지정 및 **지정범위 확대**

ㅇ 적합업종 사업조정을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는 **신속사업 조정제 도입**

29	소비자 권익 보호

가. 과제개요

□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와 불공정행위 규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과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 유도**

*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
* 금융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서민생활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적극 적발·제재**

나. 주요 추진계획

소비자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 매월 1~2개 품목의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정보 제공
* **유통 채널별·단계별 가격정보,** 소비자의 실제 구매경험에 기초한 상품정보 제공

○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 도입**

○ 소비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조속처리 추진

○ 신용조회회사가 희망자에게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서비스 제공

서민생활 밀접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 시정

○ 생필품, 금융, 교육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및 제재 강화

*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입찰상황판 등 정보 수집 채널 정비

30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가. 과제개요

□ **법 위반 억지 및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대폭 개선

* 소액다수 피해가 큰 위법행위 유형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
* 악의적이고 피해정도가 큰 위법행위 유형에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 위법행위의 직접 금지(중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고발요청권자'를 중기청장·감사원장·조달청장으로 확대

나. 주요 추진계획

(징벌적손해배상제) 하도급법 상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반품'에 우선 도입하고, **점차 도입범위 확대** 추진

* 현행「하도급법」규정 및 외국 사례를 고려, 징벌적 배상금액 상한을 **3배**로 규정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도입

ㅇ 판결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Opt-out(제외신청형) 방식' 추진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의 자격요건 및 허가요건 등 완화(법원의 변호사 보수 감액권한, 집단소송 대리횟수 제한 등)

(사인의 금지청구제)「공정거래법」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도입

ㅇ 종국적인 금지명령 이외에도 예방적 금지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

* 남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권한을 규정

(전속고발제 폐지)「공정거래법」및「하도급법」위반에 대한 **고발 요청권한**을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

* 해당 기관이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고발**

31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가. 과제개요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 사익편취행위**를 규율하고 **부당이익**을 환수

나. 주요 추진계획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강화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추가 신설

*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제3장)」에 규정 신설
* 이익을 본 총수일가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득 환수

○ 현행 부당지원금지 규정 강화

*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을 현행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현저히'를 삭제하거나 '상당히'로 완화
* 수혜자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제재
* 부당지원의 한 유형으로 통행세 관행을 신설하여 제재

○ 대기업집단 현황공시가 사익추구에 대한 경보장치로 작동되도록 개선

* 비상장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영위업종, 내부거래비중 추이 등을 분기별로 공시

지배주주 등의 횡령, 사면권 상신,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형량 강화

* 대형 경제비리 사건에서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 선고시 원칙적으로 항소

○ 「사면심사위원회」등을 통해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사면권을 엄격하게 상신(13 ~ 17년 지속 시행)

○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구형 및 항소기준 상향)

* 회계부정사건에서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

32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 과제개요

□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의 원인이 되는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

나. 주요 추진계획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 신설**

○ 기존 순환출자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출자도 신규순환출자로 간주하여 금지

○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점진적 해소 유도를 위해 공시의무 부과

대기업집단 지배시스템 개선

○ 감사위원을 맡을 사외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는 방안 마련

○ 집중투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되, 일정 상장사부터 우선 실시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하고, 대표소송제기권 등 주주권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

금산분리 강화

○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실태를 기업집단현황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방안 추진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를 위한 「은행법」 등 개정

33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가. 과제개요

□ 금융부문의 **규제감독체계**를 **개선**하여 **금융시장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

나. 주요 추진계획

(상호금융)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를 통해 **관계기관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각 중앙회**의 **조합감독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 확립**

* 금융위(원), 농식품부(수협), 행안부(새마을금고) 등 참여('13년 1월 기발족)

(유사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보험부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관련법규 개정(한미FTA 협정사항)

(펀드) 자본시장법 적용이 일부 배제·완화되고 있는 **개별법**(14개)**상 펀드**에 대해서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우체국 예금) 우체국과 민간금융회사간의 불공정경쟁*으로 인해 **우체국**으로의 **예금 쏠림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추진

* 우체국금융은 지급준비금·예보료·법인세 면제, 예금 전액보장 등 영업조건이 민간 금융회사보다 유리

추진전략 6 성장을 뒷받침 하는 경제운영

(3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35)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36) 부동산 시장 안정화

(37)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38)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39)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40) 건전 재정기조 정착

(41)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34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가. 과제개요

□ **대외부문의 충격**에 대한 우리경제의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조경제의 기반** 구축

○ 글로벌 금융재정위기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대외 충격이 국내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효과적으로 차단**할 필요

나. 주요 추진계획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외국인 증권투자 등 해외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해외자본 유출입 확대는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하고 대외 건전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선물환포지션, 외환건전성부담금** 등 기존제도의 요율, 부과방식 및 부과상품 조정

(외채 외화유동성 관리) 외채의 만기총량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외환보유고 등 공공·민간부문의 외화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 외채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domestic)-동아시아(regional)-글로벌(global)" **3단계 금융안전망** 강화

(외환건전성 제고) 외환금융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금융기관의 대외 리스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은행 등의 외환건전성 제고

(국가신용등급 관리)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척도인 국가신용등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

35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가. 과제개요

□ 글로벌 재정위기 및 국내외 경기둔화 지속 등 **경제·금융 여건불안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도모

나. 주요 추진계획

(**가계부채 연착륙**) 가계부채 규모, 증가속도, 대출구조 관리* 등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문제**가 연착륙되도록 **정책적 노력 경주**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일시상환, 변동금리, 거치식 → 분할상환, 고정금리, 비거치식)을 당초 목표('16년말까지 30%비중)대로 차질없이 추진

○ **상호금융, 보험사** 등 가계대출 규모가 큰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속도**와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

○ 금융권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 노력**을 **지원**하도록 유도

(**회사채시장 원활화**) **취약업종 및 비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회사채 발행 인프라**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도 추진

(**상호금융·저축은행 건전한 발전**) 상호금융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통한 **신뢰회복**

○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em)을 통해 수신급증 등 **'중점관리조합'** 에 대한 **관리 강화**(금감원이 중앙회 직접 검사 등)

○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도 **직접 검사**를 실시하고, 편법적 우회대출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건전경영**을 위한 **기반** 마련

36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 과제개요

□ 집값 하락, 주택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진**

나. 주요 추진계획

*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범 정부 대책을 마련중

부동산규제 정상화

○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추진

주택수급 조정

○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

○ 주택시장 **매물을 흡수**하고,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주택 수요 및 거래 회복

○ **하우스·렌트푸어 대책을 적극 실시**하여 **한계선상의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

37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가. 과제개요

□ 물가안정기조가 구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여 **서민생활 안정 기반 마련**

ㅇ 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여 선진국 수준의 **2%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

나. 주요 추진계획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유통단계 축소, 유통경로간 경쟁촉진, 유통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구조적 수급안정** 기반 마련*

* (유통단계 축소) 직거래 · 사이버거래 · 소비자참여형 거래 활성화
(경쟁촉진) 농협계통 출하 및 판매 확대
(유통체계 효율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물류효율화, 비축확대

(석유통신시장 경쟁촉진)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와 유류 공동구매 활성화, 전자상거래 시장 정착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

ㅇ 알뜰폰서비스 활성화,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유도 등을 통해 **통신요금 경쟁촉진** 및 **단말기 가격인하** 유도

(공공요금 투명성 제고)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과 원가정보 공개 체계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요금 투명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 옥외가격표시제 단계적 확대, 가격품질 비교 정보 공개 강화, 소비자단체의 원가 분석 기능 보강

38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가. 과제개요

□ 국내 생산기반 확대를 통해 **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위기 사전 대응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자주율 개념을 도입**하여 해외 개발·비축 등 **안정적 해외공급기반 구축**

나. 주요 추진계획

(위기상황별 대응 모델) 식량안보 모니터링 강화 및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해 **식량위기 사전대응 시스템** 마련

(우량농지 확보 및 농지 활용율 제고) 식량작물 재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겨울철 이모작 가능한 논을 **대상으로 밀, 보리, 사료작물 등 재배** 유도

○ **농지매입비축사업**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조정** 등 추진

(곡물 수급불안 대응) 주요 곡물의 **자주율 목표 설정 및 국내·외 비축 확대**

○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자주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국내 공공비축 대상을 현행 쌀에서 밀, 콩 등으로 확대

(해외에서 적기·적량 공급) 해외농업개발 투자 촉진, **국가곡물 조달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외 곡물확보 및 도입 역량 강화

(수산물 확보) 연근해어업 자원관리형 감척, 해외어장 개척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능력**을 높이고, **비축확대** 등으로 수급 관리 강화

39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가. 과제개요

□ 중산 · 서민층 지원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약이행 소요재원을 차질없이 마련하기 위하여 세입기반 확충

나. 주요 추진계획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대로 종료**

ㅇ 꼭 필요한 경우에는 까다롭게 검토해서 도입

ㅇ 일몰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일몰종료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

(금융소득과세 정상화) 과세형평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금융소득과세 정상화**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4천 → 2천만원)

ㅇ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ㅇ 비과세 · 감면 금융상품의 조세지원 한도 신설

(합리적 세부담 수준 결정) '13년 중 조세개혁추진위원회,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입확충의 폭 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

40	건전재정 기조의 정착

가. 과제개요

□ 낭비성 예산의 제거, 비효율적인 세출의 구조조정 및 투명한 나라살림으로 **국민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공약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기여

ㅇ 나아가 재정수지,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의 정착 및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

나. 주요 추진계획

(예산낭비 최소화 및 재정평가 활성화) 예산낭비의 사전예방과 공공사업에 대한 조사관리평가 활성화로 지출 효율화 도모

ㅇ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 성과평가, 민투 적격조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재정/공공사업 투자관리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기능 통합**

(세출구조조정) 재원마련 및 효율적인 세출구조를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세출구조조정을 추진**

ㅇ '재정구조개편추진위원회(가칭)' 를 구성하여 경제분야 재량지출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의무지출에 대한 효율화 추진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 제시 및 관리) '13~ '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를 제시***하고 건전기조 견지

* 향후 5년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관리 목표 제시

(재정위험 모니터링체제 마련 운영) 국가부채로 전이될 수 있는 잠재우발적 재정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

ㅇ 재정위험 요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핵심지표별 임계치와 가중치를 검토하여 통합 **재정위험지수를 마련 활용**

41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가. 과제개요

□ 향후 복지지출 증가 가능성, 공기업 부채 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 관리체계 마련**

ㅇ 이와 함께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 변화 (유지보존 중심→개발활용 중심) 등 정책환경에 부응하여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나. 주요 추진계획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공개관리

ㅇ 최근 IMF가 공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12.6월)'을 토대로 공공부문 부채를 작성하여 공개

ㅇ 국·공채, 연금충당부채,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 부채 항목별로 차별화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방안** 마련

ㅇ 특히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실효성 제고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국유재산관리업무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정수입 확보

ㅇ 통합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유관 시스템 및 DB를 상호 연계하고 새로운 IT기술을 활용하는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ㅇ 국유재산 양여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국유재산 특례 일몰제 도입 추진 등 **국유재산 유상사용원칙을 대폭 강화**

ㅇ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추진 등을 통해 **국유지의 적극적 개발 및 매각 활성화** 추진

국정목표 2
- 맞춤형 고용복지

추진전략 7 ····· 69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추진전략 8 ····· 81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추진전략 9 ····· 87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추진전략 10 ····· 99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추진전략 7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42)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43)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선

(44) 건강한 가정 만들기

(45)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46)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47)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48)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제 구축

(49)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50) 다문화 가족 적응 지원강화

(51)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42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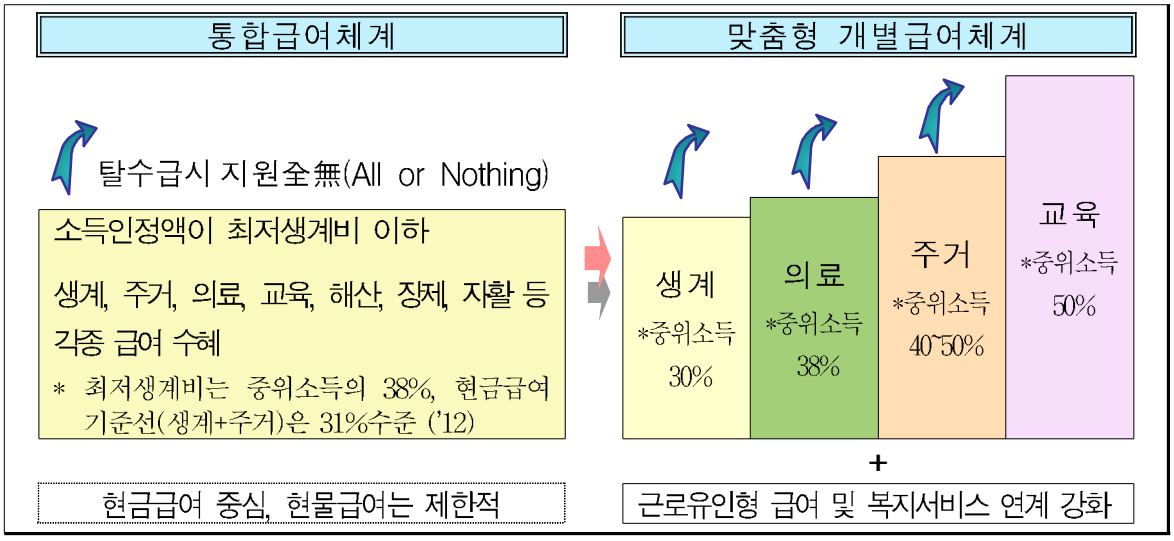
가. 과제개요

□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개편

나. 주요 추진계획

(빈곤예방정책 강화) 차상위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하고 부처별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확대, 중산층 도약 기반** 마련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별로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 차별화,**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조정통합**



< 분야별 지원프로그램 연계·조정·통합 방안 >

- ▸ (주거) **주거바우처** 도입, 저소득 민간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 ▸ (교육) 교육급여를 학비·급식비·방과 후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통합**
- ▸ (에너지) **에너지 바우처** 도입, 혹한·혹서기 에너지 지원, 지원사업 통합 강구
- ▸ (통신)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통신비 지원**방안 검토
- ▸ (문화) 통합형 여가바우처를 도입, 저소득층 문화향수 기회 확대

(사각지대 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재산의 소득 환산제** 합리화

43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가. 과제개요

□ 수요자 관점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나. 주요 추진계획

(사회보장위원회 중심의 복지거버넌스) 신설변경되는 모든 사회보장 제도 사전 점검, 유사중복 조정, 평가, 재정통계 관리기반 구축 등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주민센터를 복지서비스 허브기관으로 단계적 개편 및 복지직 공무원서비스 전문인력 확충

○ 주민센터 개편 단계로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구에 (가칭) '내일행복지원단' 우선 설치 ('13)

○ 지역주민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내일행복지원단 등의 기능을 주민센터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전환 ('14)

- 맞춤형 급여서비스 신청, 통합사례관리,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사회적 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원
- 효과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센터는 ① 거점형 ② 기능보강형 ③ 통합형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선택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모형 개발제공
- 지역은 희망복지지원단을 보강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강화

○ 주민센터 개편 선도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우선 배치 등 원활한 기능개편을 지원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 복지사업 기준을 표준화하고 사회보장정보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및 정보 공동활용 강화

(민간자원 활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공공과 민간의 복지자원 총량 파악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 나눔 확산추진

44	건강한 가정 만들기

가. 과제개요

□ 가족가치 확산 및 가족위기에 대한 개입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기능 회복

나. 주요 추진계획

(가족가치 확산) 자녀 및 부부간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가족 상담서비스 제공 및 가족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행복가족 프로그램' 운영, '자살과 이혼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전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유치원, 초·중등학교, 청소년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부모교육 실시, 공공기관가족친화기업 등 직장교육에 아버지 교육과정 개설 및 부모교육 강사 양성

(가족해체 등 위기가족 지원 강화)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신청 가족대상 가족기능 회복 지원 및 양육비 지급 이행 효율화를 위해 이행강제기관 설치 및 법률서비스 제공

(취약가족의 가족기능 회복 및 자립 강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인상,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복지지원 시스템 일원화 및 한부모 가족 공동주거시설 확대

○ 아이돌보미, 방과후 프로그램과 같은 무료 지원 등의 조손가족 통합지원 서비스 확대

45	청소년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가. 과제개요

□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로 청소년의 역량 개발 및 학업중단,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도모

나. 주요 추진계획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체험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프로그램 확대 및 지도사 배치 등으로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청소년 위기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 쉼터, 상설인터넷 치유학교 등 위기청소년 상담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

(청소년·가족서비스 연계모형 개발 및 시범운영) 복합적이고 연관성이 높은 청소년과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가족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강화) 범부처 차원의 청소년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 강화 및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46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가. 과제개요

□ 노후소득보장제도 정비 및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노인 빈곤율 (’11, 45.1%) 완화

나. 주요 추진계획

(국민행복연금 도입)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도입

*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 마련

< 도입방안 >

국민연금		현행 유지
기초연금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전체(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예외)
	연금액	(소득하위 70%) 무연금자 20만원 (A값 10%) 국민연금 수급자 14~20만원 (A값 0~3% 중복 조정) (소득상위 30%) 무연금자 약4만원 (A값 2%)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원 (A값 0~3% 중복 조정) ※ 부부가구는 상기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 감액
	시행시기	’14.7월

※ 중복조정으로 기존 가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조정 하한선 설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연간 5만개 어르신 일자리를 확충하고 일자리 참여 보수와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

* 보수 : 월 20만원 ⇒ 월 30～40만원, 기간: 7개월 ⇒ 10～12개월

(생애설계 교육 강화) 중년기 이후 체계적 생애설계가 가능하도록 ‘노후설계지원법’을 제정하고 대학 등과 연계한 생애설계 교육 시행

47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가. 과제개요

□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체계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나. 주요 추진계획

(4대 중증질환 급여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 (’16, 100%)

○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단계적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대책 추진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14: 75세 → ’15: 70세 → ‘16: 65세)

*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조정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현행 3단계인 상한제를 세분화(7단계)하되,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만원→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400만원→500만원) 조정

(실직자 보험료 부담 완화)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단계적 개편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취약지, 필수의료분야 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획일적 수가 및 가산체계를 개편하고 행위별 수가제 보완 및 약가제도 합리화 추진

(국가치매 관리체계 확립) 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 신설 검토 및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독거노인 돌봄 강화)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케어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 동원으로 독거노인의 돌봄 부담 해소

48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가. 과제개요

□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 의료서비스 체계를 예방에서 임종까지 **수요자 관점**으로 개편

나. 주요 추진계획

(예방건강관리) 담배·술 규제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 검진체계** 개편,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대응체계** 구축, **보건소 건강증진 허브화**를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 기반 마련

(의료공급체계 효율화) 동네의원-병원-대형병원간 기능 재정립* 추진,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해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형 건강플랫폼" ** 모델 확산**

* 일차의료 활성화, 전문병원/지역거점병원 육성,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

** 병의원, 보건소, 체육시설, 공공기관, 기업체 등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자원이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영역·제도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는 혁신모형

(응급의료) 자동제세동기 보급 확대,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응급의료전용헬기** 확충, 응급의료기관 기능개편, **중증외상센터 지역균형 배치** 등 추진

(공공의료)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지역→권역별로 체계적 의료 공급 기반 구축

* (기초) 농어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육성, (지역) 지역거점병원 지정·육성 (권역)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권역거점의료기관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

(노인의료) 회복병원 체계 강화, **'의료+요양+생활 통합서비스'** 활성화, **호스피스가정간호** 등 **노인의료체계 확충**

(인프라) 의료인력, 병상 등 **의료자원의 합리적 수급 관리 도모,** 고령화 등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시스템 개편**

* 의료취약지 근무인력 및 일차의료인력 양성, 의사수련과정개편, 간호인력체계 개편 등

49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가. 과제개요

□ 장애인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

나. 주요 추진계획

(장애인권리보장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검토 및 개인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판정체계로 단계적 개선

(중증장애인 보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및 급여 확대, 응급안전시스템, 단기 및 주·야간보호 서비스, 그룹홈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발달장애인법 제정) 발달장애인 실태 등 고려, 단계적 입법 추진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대상 확대)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맞춰 시행

(공공의료 강화) 권역재활병원재활중심 거점 보건소 중심의 공공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및 재활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

(이동권 증진)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

(주거권 보장) 주택개조시 기금 융자,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주거약자용 주택건설 비율 확대, 장애물 없는 주택설계 확대 등 검토

(정보격차 해소)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장애유형별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사랑의 그린PC 무료 보급, IT 교육 등 추진

(고용의무 이행) 장애인 고용우수 기업 인증마크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저조기업 명단 공표,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확대,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청각장애인 지원)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검토 및 법제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특수교육교원 수화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장애학생 교육지원) 특수학교 신증설, 특수교사 정원확보율 제고, 전공과 학급 확대,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확대 및 지원 사업 대학의무운영 추진

50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가. 과제개요

□ 초기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응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들의 정착단계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확대하여 원활한 사회통합과 결혼이민자들의 행복한 가정생활 유도

나. 주요 추진계획

정착단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 입국전 사전교육 강화, 입국후 초기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파견, 결혼이민자간 멘토링 연계 및 종합정보 콜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자녀세대의 특성화를 위한 '아시아 브릿지' 인재양성 및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적응프로그램 운영

일반국민의 다문화인식 제고

○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조정 강화 등

○ 총리실의 관련 부처간 유사중복사업 상시 조정기능 강화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해 전문가-학계-시민사회-기업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포럼' 운영 활성화

기금 설치 등을 통한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 국내 거주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외국인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 방법으로 기금 운용 추진

51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가. 과제개요

□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 만들기

ㅇ 농어촌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을 키우고, **자구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여 긍정적 분위기 조성

나. 주요 추진계획

(복지) 농어촌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ㅇ 산재보험 수준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준소득 상향조정**을 통한 지원 확대 및 **공동 생활홈** 조성과 **마을리모델링** 추진

(생활여건) 주거 의료 교육 등 **도시 수준으로 정주여건 개선**

ㅇ 마을회관에 **공동급식시설** 설치 및 **가사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 및 **도시가스배관 확대**

ㅇ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시스템** 구축 및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에 대한 지원 확대

(농어촌 주민 주도 지역개발) '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

ㅇ '17년까지 색깔있는 마을* 5,000개를 육성, 전체 농어촌 마을로 확산하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특별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

* 주민주도로 유무형의 마을자원을 활용, 소득원 창출 및 마을 정비,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거주·체험·여가·치유 공간으로 발전된 마을

추진전략 8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52)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53)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54)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55)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52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가. 과제개요

□ 근로장려세제-사회보험료 지원-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하는 것이 유리한 급여체계로 개편,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

나. 주요 추진계획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 소득기준(중위소득 50% 수준), 점증구간점증률 확대를 통해 최대급여액 인상

○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장려세제 전면 적용

○ 생계급여 수급 의존보다 취업 후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도록 연계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의 단계적 확대 및 EITC 지원 연계 추진

○ 자산형성 지원을 취창업 수급자에서 자활참여자, 차상위까지 확대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 근로능력 있는 빈곤계층은 우선적으로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의뢰하여 일반노동시장 취업 지원

○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는 특화프로그램(희망리본, 자활센터 등)에서 집중관리로 재도전을 도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복지부)과 일모아시스템(고용부) 연계

○ 복지일자리 통합 지원을 위해 시군구에 '내일행복지원단' 설치·운영

○ 지역자활센터는 밀착사례관리기관,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등으로 단계적 전환 지원

○ 근로빈곤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용센터 인력인프라 확충 추진

○ (가칭) '빈곤예방 및 탈출을 위한 저소득층 자립지원법' 제정 추진

53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가. 과제개요

□ 구인-구직자 매칭 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 촘촘한 고용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및 고용률 제고 지원

나. 주요 추진계획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강화) 구직등록-취업애로요인 진단-맞춤형 직업훈련-취업알선 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단계별 맞춤형 패키지사업의 개선 확대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청년 중장년 여성 근로빈곤층 장애인 제대군인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청년)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청년 NEET대상 맞춤형 취업지원패키지 강화 등
(중장년)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전직지원서비스 강화 등
(여성)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강화 등
(근로빈곤층) 고용·복지 연계 맞춤형패키지 서비스 제공 등
(제대군인, 퇴직경찰 등) 취업특강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캠프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요자 맞춤형 패키지사업 중심으로 재구조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간 통합·패키지화, 고용서비스·직업훈련의 비중 확대

(고용서비스망 연계 강화) 워크넷을 일자리종합정보망 으로 구축하여 공공민간간 일자리 정보망 연계 등 정보 공유 확대

*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각 부처 민간위탁기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민간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활성화) 우수한 민간 직업소개소, 직업훈련기관 등을 육성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

54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가. 과제개요

□ 복지 일자리 확충처우개선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및 서비스 질 제고

나. 주요 추진계획

민간·공공 사회복지 인력 확충

○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및 근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력 배치 확대 추진**

* 생활시설 3교대 근무, 각 사회복지시설 인력 배치기준 조정 등

○ (공공) **개별급여전환, 주민센터 개편과 연계,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추진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분야 우선배치 확대

○ 사회복무요원의 **심화직무교육 확대** 추진 병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

○ **국고보조시설(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운영비 인상, 지방 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향조정

○ **장기근속자 포상, 각종 복지혜택* 마련**하여 사기 진작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포함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 4대 돌봄 바우처 사업* 중심으로 **서비스 유형 및 임금체계 표준안** 검토 및 방안 마련

* 가사간병,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가칭) **「사회서비스 사업지원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및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 신설

55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가. 과제개요

□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서비스 산업화 기반 강화**를 통한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나. 주요 추진계획

범부처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 돌봄, 건강관리, 상담, 역량개발 등 **국민욕구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분야 발굴**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참여형 직접 지원 일자리 확충**

사회서비스 산업화 기반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신설, **공급 현황 파악** 및 **지원 근거** 마련

○ **사회서비스 R&D 예산 투자 확대**

○ **소셜벤처 창업** 및 사회서비스업 규모화, 전문화를 위해 **세제 금융 공동홍보 컨설팅** 등 지원 확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참여**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및 제공방식 효율화

○ **지역 중심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확대**

고부가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 육성 및 체계적 관리

○ 고부가 사회서비스 필요 **인력수급 전망 및 전문인력 관리** 추진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종사여건 개선

○ **가사사용인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자율개선 지원

추진전략 9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56) 주거안정 대책 강화

(57) 서민 금융부담 완화

(58) 교육비 부담 경감

(59) 통신비 부담 낮추기

(60) 농어가 소득 증대

(61)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62)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63)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64)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56	주거안정 대책 강화

가. 과제개요

□ 과도한 대출상환 및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

나. 주요 추진계획

(하우스 푸어)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주택지분 매각제」 시행**

○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주택연금 사전가입제**(60→50세) 추진

(렌트 푸어)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실시**

○ 수요가 높은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5년간 20만호)

○ **전세 수요자**를 위해 입주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

(보편적 주거복지)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

○ **매입전세임대 확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추진

57	서민 금융부담 완화

가. 과제개요

□ **신용회복지원, 고금리부담 경감**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추심 등에 따른 **금융피해를 예방**

나. 주요 추진계획

(**국민행복기금 설립**) **채무불이행자 및 학자금대출자**의 채무조정, 고금리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설립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금융회사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 실시**

* 단기연체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저금리대출로의 전환**) 기존 바꿔드림론보다 **지원 대상·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서민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장학재단과 금융회사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 실시**

(**프리워크아웃 확대**) 연체우려·단기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자활 지원**

(**불법추심 피해방지**) **민간 자산관리회사**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항변권 강화**) 소비자에게 **신용평가 결과**를 **통지**하고 부적정한 등급이라 판단시 **이의제기**하는 **경로** 마련

58	교육비 부담 경감

가. 과제개요

□ **학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감축**하여, 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교육 실현

나. 주요 추진계획

(고교 무상교육 실시) 지역별 소득계층별 교육비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

* 사립외고·국제고와 자사고에 대한 무상교육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후 검토

(사교육비 경감 추진)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EBS 교육서비스 운영을 내실화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희망하는 **여러 곳의 대학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지원하고, **대입 전형료 투명성 제고 추진**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실제 등록금 대비 **소득수준별 지원*을 추진**하고 **든든학자금(ICL) 대출자격**을 **전면 확대****

* 소득수준별 지원방안 : 기초~8분위, 전액~25%
** 소득 8분위 이상 학부생으로 전면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든든학자금(ICL)과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율 인하**를 통해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국공유지 및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연합) 기숙사 건립**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확대**하고 **기숙사비 인하 추진**

59	통신비 부담 낮추기

가. 과제개요

□ 고가 스마트 폰의 확산, 통신서비스 이용량*의 증가로 통신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추진

* 전체 이동통신 데이타량은 '09.11월 대비 약 130배 증가('12.11월 기준)

** 가계 통신비 : 가구당(3.4명) '08년 월 13만4천원 → '12년 3/4분기 월 15만5천원

나. 주요 추진계획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유도) 소비자가 가입시 마다 지출하는 가입비(평균 3만원)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15년 말까지 폐지 유도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 기존 이동전화보다 20~30% 싼 알뜰폰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통업체 등의 시장 진입 유도 등을 추진하여 이동통신시장의 요금경쟁 촉진

* 알뜰폰서비스: 기존 이통3사의 망을 도매로 빌려 이동전화서비스 제공

(무선인터넷전화 이용 확대 유도) 음성전화 대체가 가능하지만 현재 5만 4천원이상 요금제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이용 가능토록 확대 유도

(스마트폰 가격 인하 유도) 중저가 단말기 등 다양한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로 단말기 가격 경쟁 유도

* 통신사가 아닌 제조업체·편의점·온라인쇼핑몰 등이 유통하는 단말기를 이용자가 구입하여 원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는 제도

○ 제조사 유통업체 알뜰폰 업체 등으로 공동조달·판매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자급 단말기의 품질 제고를 위해 테스트 베드 지원

60	농어가 소득 증대

가. 과제개요

□ 재해지원, 직접지불제, 경영비 절감 등을 통한 **농어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FTA **지원대책** 내실화 추진

나. 주요 추진계획

(재해대응) 실질적인 재해지원을 위해 **보험지원제도 전면 개편**

○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장의 범위와 보험료도 현실성 있게 재편

-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은 **과수 종합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농어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농작물의 **국가재보험 기준 손해율을 하향조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한 **전문손해 평가인력 양성** 및 **통계조사 강화** 등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

○ 피해산정 기준, 정전 2차 피해 등 재해복구지원 현실화 추진

(직접지불제) **쌀 밭직불**의 단가인상 및 제도개선 추진

○ **쌀고정직불금은** 단계적으로 인상('12년 ha당 70만원 → 100만원)하고 밭 직불제는 연차적으로 **지원대상 품목과 지목 제한**을 **해제**

○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작물도 밭직불 대상에 포함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격 시행

(농업경영비 절감) 농자재유통센터 건립, 농자재 공정거래체계 확립, 농기계 임대 확대로 **농자재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농작업 대행도 확대**

(FTA 보완대책) **국내 대책 추진상황**을 내실있게 관리보완

61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가. 과제개요

□ 기존 도매시장 중심에서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계열화·직거래 확산**을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상생구조** 마련

나. 주요 추진계획

농·수협 중심의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를 축소, 생산자·소비자에게 혜택

○ **농산물**은 농협 산지유통센터 확충 및 '13~' 15년중, 5대 권역별 '농산물도매물류센터' 개설 등으로 **농협 비중을 대폭 확대**

○ **축산물**은 선진국형 도축가공유통 일관시스템을 통해 계열화를 확립하고, 농협 관리·운영 점포를 대폭 늘려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

- 농가는 생산, 지역축협은 수집공급, 농협중앙회는 도축가공 유통판매를 담당하는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 **수산물**은 수협중앙회를 판매조직으로 육성하여 산지수협이 생산한 상품을 수협중앙회가 직접 판매(도매중심) 추진

생협, 직거래, 사이버거래 등 **소비자·생산자 주도 유통경로 확산**과 **직거래 비중 확대**로 유통망간 경쟁체계 구축

○ 생협, 파머스 마켓, 로컬푸드(지역내), 꾸러미 사업(농촌-도시간) 활성화를 위한 (가칭) **농산물 직거래법 제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 유통 효율화 추진

○ 수시로 파동을 겪는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물량과 농식품유통공사 **상시비축물량을 가격급등시 방출하여 가격안정 도모**

62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가. 과제개요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

○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임금체불 청산**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

나. 주요 추진계획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개선 추진

*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 도입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추진 및 **불법파견 판정(결)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 동종·유사 업무의 원·하청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과 수준 확대('13.4~) 및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 검토('14~)

(대상근로자) 125만원 미만 ⇒ 130만원 미만

(지원수준) 1/3~1/2 차등지원 ⇒ 일괄 1/2 지원

○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 고용보험 적용 확대방안 마련추진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및 임금체불 청산) 합리적인 최저임금 최저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 설정** 등

○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제도 개선**(지연이자제 도입, 임금체불 예방 감시시스템 구축 등), 감독 강화 및 대국민 캠페인 등 인식 개선 추진

63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가. 과제개요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

나. 주요 추진계획

(근로시간제도 및 교대제 개편 지원)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 및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되, 연착륙 방안 병행 추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중소기업 교대제 개편 패키지 지원**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세대간 상생고용 프로그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신규채용시 임금 일부 등 지원**

(단계적 정년 연장) 노사정 공론화를 통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 정년 의무화 이전까지 **고용지원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율적 정년 연장 유도** 및 2050 함께 일하기 캠페인 등 **공감대 확산**

(재취업 지원) 인생 이모작을 위한 **'숙련진단 및 경력경로 설계'**, **중장년층 취업아카데미** 개설 등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지원**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중장년층 전직지원 의무** 부과 등 **전직훈련 활성화**와 함께 **퇴직인력의 전문성경험 활용기회*** 확대

* 사회공헌 일자리사업(50세 이상 퇴직전문인력), 산업현장교수단(명장 등) 등

64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가. 과제개요

□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불안 완화 및 노동시장 참여 제고**

나. 주요 추진계획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등 판례상 **해고회피 노력 인정 사유 명문화** 등 해고회피노력 강화

○ 일이 많을 때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시에는 저축한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

○ 사용자가 해고자에게 서면으로 **재고용 우선권**에 대해 알리고, 재고용 의무기간 동안 관련 채용계획을 통지하도록 의무화

(고용재난지역<고용촉진특별구역> 선정 지원) 지정기준 완화 및 고용부장관의 **직권지정 가능 요건*** 신설을 통한 **신속 지원**

* 단기간 내에 회복하기 어려운 고용 감소 등

○ **주요 지역 업종에 대한 일자리 예보체계를 구축**하여 불황 업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지역고용 활성화와 해고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지원과 지역고용활성화 패키지*** **제공**

* 고용유지자금 대부, 무급휴업·휴직자 우선 지원, 힐링 프로그램+지역맞춤형 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요건 완화+종합취업지원대책, 구직급여의 지역연장급여제도 도입 등

추진전략 10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65) 행복한 임신과 출산

(66)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67)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68)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65	행복한 임신과 출산

가. 과제 개요

□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요 요인인 **저출산 문제 해소**

나. 주요 추진계획

(맞춤형 임신·출산 비용 지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영양플러스 지원, 난임 부부 체외수정 지원 확대, 산전 방문간호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확대,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비 본인부담 폐지 및 항목 확대 추진

(고위험 임산부 지원) 고위험산모에게 고운맘카드(50만원)외 경비 추가 지원, 권역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 설치운영

(임신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 공공형 산부인과 ’16년까지 단계적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수준방법 등을 검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다자녀 지원)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단계적 확대,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 마련

(일터에서의 임신출산지원 강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 도입,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발굴 및 참여 사업장 지원 수준 인상, 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출산정책 거버넌스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심의 인구정책컨트롤타워 운영, 공공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66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가. 과제 개요

□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 및 육아여건 개선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시스템 구축

나. 주요 추진계획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 및 직장보육시설 확충

* 보육교사 처우개선 실태 조사 및 임금수준 평가인증 연계 추진 병행

(맞춤형 보육 서비스) 일시보육서비스 확대 검토 및 **육아종합 지원센터 전국 확산**

(근로자 자녀양육 여건 조성)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 사용 확대 검토추진,** 비정규직 **계속고용지원금** 및 중소기업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 확대** 등

(돌봄서비스 확대) 영아종일제 지원, 시간제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방과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영아종일제) 현행 만12개월 이하 아동에서 만 2세 이하까지 단계적 확대
(시간제 이용대상) 취업부모 자녀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

(학교내 돌봄강화)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무료 제공, 저녁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 돌봄서비스 종합안내·공동 수요조사·사각지대 해소 등 연계, 지역협의체 구성 등 부처별 돌봄사업 연계체제 강화 병행

(문화예술 돌봄교육 활성화) 방과 후 돌봄교실 연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소외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대상 1인 1예능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대상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67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0~5세)

가. 과제개요

□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

○ **0-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을 통해 **보육관련 가계부담** 해소

○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나. 주요 추진계획

0-5세 보육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 (보건복지부)

○ **(보육료 전액 지원)** 0~5세 보육료 계층 지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시설 이용 비용 지원 검토

○ **(적정보육료 산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계측

○ **(양육수당)** 시설미이용 0~2세 차상위 가구에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소득구분 없이 0~5세까지 계층 확대

○ **(평가인증)** 평가인증 강화 및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운영으로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 **(누리과정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단계적 인상 추진

○ **(교사 확충 등)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에 필요한 **유치원 교사 확보** 및 **역량강화**

-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한 **단계적 처우개선** 추진

68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가. 과제개요

□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구현

나. 주요 추진계획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공직, 교직, 공공기관 등의 여성관리자 및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인재 아카데미 설치를 통한 여성리더 양성 및 여성 인재풀 확충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학력경력단절기간 등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및 종합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가족친화인증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유연한 일자리 확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착)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부문별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 내실화,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확대

ㅇ 여성정책조정회의 기능 강화,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의 주기적 측정·발표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 확산

국정목표 3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추진전략 11 107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추진전략 12 113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추진전략 13 119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추진전략 11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70)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71)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72)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가. 과제개요

□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

나. 주요 추진계획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기본 인성덕목 생활화 교육 실시, 학생참여와 **협력 학습 강화, 인성중심 학교문화 조성*** 추진

*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사 연수 등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토론 실습 체험 중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제도**를 **개선****

* 한 학기동안 지필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단위학교의 운영자율성 대폭 확대

** 초등학교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 중학교는 평가과목 감축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참고서가 없어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디지털교과서와 연계**

(학교체육 활성화) 체육전담교사,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및 **우수 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충**하고 재학중 **직업체험 확대, 온라인 진로설계 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개인의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연계 활용**

70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가. 과제개요

□ 지나치게 **복잡한 입학전형**을 **간소화**하여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지역계층을 고려한 **고른 기회 입학 전형 확대**

나. 주요 추진계획

(대입전형 간소화) 전형요소를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복잡한 전형명칭**도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요소를 간소화하고, **고교교육에서 이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

대입전형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제정예정)」에 **규정 추진**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신입생의 **소득지역계층**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

(대입전형 3년 예고제) 학생들이 **중3때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입전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년 전 예고하는 방안 추진**

71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가. 과제개요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 연구여건 개선으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ㅇ 효율적인 대학재정 지원 및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글로컬 지역대학 특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대학 집중 육성

나. 주요 추진계획

(재정지원 확대) 임기 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규모 GDP 대비 1% 수준 달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지원규모 확대

(재정지원 사업 확대 지원)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재편

ㅇ 국가장학금 확대, 지역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 미래성장 산업분야 인재양성 등에 중점 투자

ㅇ 특히, 추가 확보되는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 육성에 집중 투자

ㅇ 선도대학연구소를 통한 연구와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인력 양성시스템 투자

(성과평가 및 관리)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투자성과를 제고하고 대학교육의 질 관리 강화

ㅇ 졸업 후 진로를 책임지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교육활동을 대학 정보공시사항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

72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가. 과제개요

□ 교원의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를 경감**하고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교육의 질 제고**

나. 주요 추진계획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학교교육 통계 조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 시·도교육청이 학교교육 통계·정보를 관리·제공하도록 입법화하고 매학기별로 주요통계를 조사·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 에듀파인 활용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추진

(교원평가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를 **교원평가로 일원화**하고,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조정**

(신규교사 채용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개선**하고, 내실 있는 수업준비와 학생지도를 위해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학생수용계획(실태조사)을 수립하여 학급증설 및 신설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국가 상위 수준**으로 **감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과 연계하여 시·도교육청, 지역별, 학교급별 교원 수급 계획 수립

추진전략 12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7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74)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75)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7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가. 과제개요

□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중심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

ㅇ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를 강화하고, 고졸 재직자의 학위취득 및 경력개발 인프라를 구축

나. 주요 추진계획

(범부처 지원) 산업정책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소관 **부처, 지자체, 산업체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육성에 참여하도록 장려**

(마이스터고 다양화) 국가지역 **전략산업**, FTA 대비 집중 육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현장중심 교육 운영)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표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직업교육 기회 확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입학 시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 등을 중점 반영한 선발 제도를 확대, 취업희망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위탁 확대·다양화 추진 등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고졸 취업자 등 재직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위 취득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직자 대상 **국비 해외유학 프로그램** 신설 추진

* 성인근로자 중심 학사운영개선(학점교류, 유연학기제 등), 재직경력의 학점 인정, 후진학 장학금 지원 등

74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가. 과제개요

□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 및 **재정투자 대폭 확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및 국제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

나. 주요 추진계획

(특성화 100개교) 전문대학이 **산업기술인력, 서비스산업인력** 등 산업분야별 **핵심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학과별 특성화 유도**

*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과는 별개로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사업 설계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전문대학 **학제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 강화** 등 **기능 다변화** 도모

(산업기술명장대학원 과정 설치) **전문기술기능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대학원 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숙련기술 발전기회 제공**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육성) 전문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 (가칭) '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으로 **전환하여 평생학습 핵심기관**으로 육성

○ **창업보육, 자격취득 지원, 중소기업 공동교육실습** 제공 등 비학위 과정을 중심으로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운영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국내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산업체**에 **취업**하는 GHC(Global Hub College) **사업 확대**

○ 전문대학생 해외연수 사업의 경우 **해외취업과 연계성 제고**

75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가. 과제개요

□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반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스마트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ㅇ 이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평균(40.4%) 이상으로 향상

나. 주요 추진계획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한 평생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평생교육 종합 서비스 개통**

(행복학습지원센터 설치)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학습지원센터**(읍면동 단위)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지원

ㅇ **시군구별 평생학습관도서관** 등을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지역별 행복학습지원센터 간 **교류 및 학습정보 공유 촉진**

(평생학습 네트워크)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ㅇ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고 대학 및 지자체에 평생교육 관련 재정지원시 **대학-산업체-지자체간 연계성** 심사

ㅇ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활용하여 지자체,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설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 종합제공**

(맞춤형 평생교육)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추진

ㅇ 취미 및 여가생활(노년층), 창업전직지원(장년층) 등 **세대별 수요를 고려**한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

ㅇ **저학력자,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지원 병행

추진전략 13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76)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77)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78)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79) 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80)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81)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82) 생태휴식 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76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가. 과제개요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창작 기반 마련, 콘텐츠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나. 주요 추진계획

문화재정 2% 달성

○ ‘문화재정 2.0%’를 달성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회계 등 예산과 별도 세입이 있는 기금 재원을 균형 있게 확충

문화기본법 제정

○ 국민행복, 사회통합, 갈등치유와 소통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과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문화기본법」 제정(‘13 제정안 발의)

-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정책사업의 문화적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조정으로 문화국가 실현의 제도적 토대 마련

-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시행관리 시스템 구축

○ 여가활성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보호증진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메세나법) 등 연계법안 제정 추진(‘13)

국민 문화행복지수를 개발하고(‘13), 정기적인 문화센서스 실시(‘14~)

77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가. 과제개요

□ 예술인 복지 확충 및 문화예술 단체 지원 강화

□ 순수예술분야와 다양성 영화 등 비주류 문화예술 분야 창작 지원

나. 주요 추진계획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

○ 예술인 패스 도입 및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 조세지원 강화**
- 미술품 감정평가제 도입 및 **기업 미술품 구입시 손비인정 범위 확대**

순수기초예술 및 독립인디다양성 장르 등 지원 강화

○ **폐산업시설과 군사시설(서계동 등)의 문화관광 공간 재조성**

○ **예술분야 공공기관 운영 합리화와 국립예술단체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비영리 문화법인 제도 도입

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등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CT 5대 핵심기술 개발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음악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음원전송사용료제 개선**

78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가. 과제개요

□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등 문화소외 계층 문화향유 권리 보장, 지역 문화격차 해소

나. 주요 추진계획

주민센터, 문예회관 등을 리모델링,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ㅇ 지역사회 문화동호회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

* 조성 후 3년간, 인큐베이팅 단계에서는 모델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 정착 지원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여가모델 개발보급

ㅇ 어린이집・유치원에 문화예술교육사 파견('14, 1,300개)

ㅇ **전국 모든 학교(11,532개교)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ㅇ 공연장, 박물관, 경기장 등 할인면제를 위한 **청소년 패스** 도입

ㅇ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운영 및 직장동호회 문화예술교육사 파견

ㅇ **문화114 콜센터 운영** 및 **문화복지사 지역별 배치** 운영

ㅇ 은퇴계층을 위한 골든에이지 캠페인과 자원봉사 기회 제공

예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등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지역문화재단을 지역 거점으로 육성

ㅇ 지역 상주단체 육성 및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사업 대폭 확대**

문화・관광・체육시설 투자금액에 세액공제 혜택 제공 등

79	문화유산 보존 · 활용 및 한국문화 진흥

가. 과제개요

□ 문화유산 관리 강화, 향유기회 확대 및 한국문화 진흥체계 구축

□ 남북 간 및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다양성 증진

나. 주요 추진계획

무형문화유산 법률 제정 및 **문화재 보호기금 확충**

ㅇ 서원향교 등 문화관광 자원화 및 문화유산 디지털 DB 구축

권역별 국립 수장고 건립 및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의 국립 승격 등

한국학, 한국어, 전통문화,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정신문화 진작

ㅇ **한민족 문화아카이브 구축 및 도서관의 인문학 부흥 거점화**

ㅇ 재외 한국문화원세종학당을 해외한국문화보급의 거점기관으로 활용

남북한 동질성 회복과 협력기반 조성 및 **문화다양성 증진**

ㅇ **세계문화의집 조성, 상호문화교류의 해** 운영

ㅇ 문화예술 ODA 사업 및 **무지개다리 사업 확대**

국제문화교류진흥 법률 제정 및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설립

재외 한국문화원 확대, 뉴욕·파리 코리아센터 전환

한국문화원장 문화 전문성 강화 및 근거 법령 제정 추진

세종학당 확대전문성 강화 및 한국어 교육 총괄 조정기능 수행

80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가. 과제개요

□ 과제목표

ㅇ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참여율을 두 배로 증가시켜 건강한 100세 시대 견인

나. 주요 추진계획

100세까지 건강하게,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통합콜센터(#7330)** 도입

ㅇ **전 국민 스포츠체력 인증제** 도입(2013/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군・구(227개)에 **문화법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설립**

ㅇ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 및 선수 출신 지도자의 일자리 창출

국가대표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 진로 지원 등 체육인복지 강화

ㅇ 국가대표 경력자 지도자 자격 취득 요건 완화로 취업 지원

태릉선수촌 기능 유지, 국가대표훈련장 단계적 기능 분담

올림픽공원내 체육인 명예의 전당・호텔・컨벤션을 갖춘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를 조성

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ㅇ **스포츠강사 법제화**('13)를 통한 제도적 정착 및 근무기간 연장 (10개월→1년) 및 보수 현실화, 전문성 강화로 스포츠 일자리 창출

81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가. 과제개요

□ 고부가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2017년 외래관광객 1,600만명을 달성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

나. 주요 추진계획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전통문화 체험, 레저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6대 관광·레저산업 육성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

○ **대체휴일제, 방학분산제** 도입 등 여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 **올해의 문화관광도시**를 선정, 홍보마케팅·안내 체계 집중 지원

○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근로자 여행장려제도) 도입 추진**

관광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 관광종사원 취업박람회 개최(2013~), 표준용역계약서 제정보급, 관광통역안내사 공제회 설립지원 등 근로여건 개선

지역 관광업체, 문화계, 상공인,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CVB: Convention & Visitor's Bureau) **설립**을 지원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추진

저가관광을 탈피하여 고품격 관광으로 근본적 체질 개선

소외계층 여행바우처 지원 및 무장애환경(barrier free) 인프라 확충

고부가가치 창출 관광객에 대한 고품격 출입국행정서비스 제공

82	생태휴식공간 확대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가. 과제개요

□ **주거, 공원, 녹지, 하천 등 일상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나. 주요 추진계획

(생태휴식공간 확충) 국가도시공원, 동네쉼터, 도시농업 공간, 생활권 마을숲, 생태놀이터 등 **도심 생태휴식공간 확충**

○ **숲길과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생명축을** 복원하고 지류하천을 생태·레져·문화 등을 종합 고려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품격 있는 도시공간 조성) 높아진 국가 위상에 어울리는 **아름답고 품격이 흐르는 도시·건축문화** 형성 및 **국토경관축 조성**

○ 도시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걷는 길휴식문화공간 등을 확충**하고 놀이터,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등 **기초 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원** 추진

(생활환경 개선) 작지만 국민의 **일상 속 영향이 큰 불편사항 해소**

○ **(주택)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아파트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

○ **(교통)** 저상버스·무장애시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환경 개선**

○ **(기타)** 교통·생활소음, 과도한 야간 눈부심 등 개선방안 마련

국정목표 4
- 안전과 통합의 사회

추진전략 14 131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추진전략 15 141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추진전략 16 151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추진전략 17 161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추진전략 18 169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추진전략 14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83) 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84)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85)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8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87) 아동인권 보호강화 및 건강한 성장 발달지원

(88)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89)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

(90)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83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 과제개요

□ 성폭력 등 심각한 아동여성폭력 범죄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 지원을 내실화

나. 주요 추진계획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체계 구축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 여성아동의 생애주기별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성인권 교육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 범죄 단속 강화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구축 및 성범죄자 관리체계 확립

○ 검찰청 및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반 설치, 신상정보 등록자 등 우범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성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교육 등 재범방지 시스템 강화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 상담, 수사부터 재판까지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법률지원 강화, 상담주거의료 등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치료재활 지원 체계 구축

- 원스톱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확충 및 성폭력피해자와 가족의 기초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 간병서비스 등 지원

84

85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가. 과제개요

□ 안전한 식품을 통한 **소비자 건강 보호 및 신뢰제고**

* '안전' 또는 '보통' 비율 : ('12) 66% → ('17) 80%
* 학교앞 식품안전 불안감 : ('12) 48% → ('17) 20%

나. 주요 추진계획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 식품범죄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학생안전지역내 문방구점 등 식품 판매행위 금지, 음식점 위생 등급제 도입, 인터넷 불법 식의약품 유통판매 차단, 합동단속 추진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및 소통전담조직 구축

○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위해소통센터 설립으로 체계적 식품안전 소통망 구축

부적합 식품 차단추적관리 강화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17년까지 전면 확대, 식품이력 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쇠고기 전자적 거래신고 확대

농·축산식품 위생관리 강화

○ GAP(농산물우수관리)HACCP(식품안전인증) 적용 확대

식품안전 소비자 참여 확대

○ 원산지 및 영양성분 표시 확대, 식품용기 그린마크 및 포장 유통 농수산물 표시제 도입,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축산물 관리에도 적용

급식소 위생강화

○ 급식조달시스템과 식중독 경보시스템 연계, 납품 전 안전성 조사 체계 구축,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생산제조단계 안전관리 강화

○ 오염된 해역·토양 등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식염 등 유통·판매 차단, 식품안전인증(HACCP) 의무적용 확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 구축, 수출국 현지실사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8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가. 과제개요

□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나. 주요 추진계획

(학생위험 제로 학교 환경 조성) 학교 반경 200M 이내 학생 안전지역(safe zone) 지정

○ **CCTV 성능 개선 및 설치 확대, 지자체 통합관제 강화** 등 학생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생보호인력 운영 내실화, SOS 국민안심서비스 확대** 등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

(상담치료지원 강화)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 상담 인력 배치 확대**를 통해 **상담 치료지원 강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학교폭력 자살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관리 체계 확립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 개발*하고 단계적 보급 확대

* 집단상담을 기반으로 학생·교원·학부모의 공감·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어울림프로그램"(2012년부터 시범운영 중)을 보완하여 개발

○ 자녀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 확대**

○ 학생자치법정, 또래상담, 또래조정 등 다양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87	아동인권 보호 강화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가. 과제개요

□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지원** 및 **동등한 출발기회** 제공

나. 주요 추진계획

(드림스타트센터 확대) 아동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빈곤아동이 많은 **읍면동 전체**로 **단계적 확충**

< 주요 기능 >

- ▶ 지역 내 복지자원 관리 및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 ▶ 지원 대상 아동 발굴 및 아동별 욕구사정
- ▶ 서비스 조정・연계: 현금, 바우처, 학대피해자 보호, 급식 등
- ▶ 초기상담, 지원계획, 서비스 지원·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
- ▶ 요보호아동 판정・분류・보호체계 결정・연계

(아동발달지원계좌 확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경제교육, 후원자 멘토링** 등 다양한 지원과 연계

(아동인권 보호 및 아동안전 강화) 아동인권 및 안전 관련 **총괄 조정체계 구축,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 제도** 강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

* 학대행위자의 형 또는 보호처분 종료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취업 및 운영제한, 위반시 처벌 강화

** 피해아동 전용 치료보호시설 운영 및 가족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입양아동의 안전권익 보호) **국내 입양가정 및 미혼모 지원 내실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

88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 과제개요

□ 범죄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 및 건강한 사회생활 지원

ㅇ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시설 확충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의료 지원 강화

ㅇ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통한 상담 및 법률지원 강화

나. 주요 추진계획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를 위한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전국에 설치, 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한 심리치료 비용과 피해자 간병비 등 치료 수반 경비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강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일선 검찰청에 배치하여 법률지원 강화, ‘법률홈닥터’ 및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강화) 범죄발생 초기의 긴급한 소요를 위한 필요경비 지원, 범죄피해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위한 이사비와 주거마련 비용 일부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범죄피해 유형별 조력지원 매뉴얼 마련으로 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89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가. 과제개요

□ 법질서 존중 문화 확산과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신뢰사회 구현

ㅇ 헌법법률 교육 강화 등을 통한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

ㅇ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대응체제를 구축, 안전한 사회 구현

ㅇ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나. 주요 추진계획

(법교육 강화) 민주 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 등 법교육 강화,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 및 법체험 포털 활성화

(법질서 확립 운동) 지자체 민간과 함께하는 법질서확립 운동 및 공익캠페인 전개

(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공직비리 권력형 비리 등 사회지도층 범죄 집중 단속, 비리 근절을 위한 장단기 대책 수립

ㅇ 또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형집행 과정 등에서 특혜 시비가 없도록 법 집행의 공정성도 제고

(불법집단행동 대응체제 구축)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 체제 수립

ㅇ 아울러,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시민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도 강화

90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가. 과제개요

□ 선진국 수준의 경찰인력 증원, 직무특성이 반영된 보수체계 개선, 조직혁신 등을 통해 **민생치안 역량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나. 주요 추진계획

(경찰 책임성 강화) 총경급 이상 고위직 청렴도 평가제, 부패 징계 전력자 주요보직 원천 배제하는 「부패 One Strike Out」제도 시행 등으로 부패비리를 근절, 치안행정의 투명성 · 신뢰성 확보

ㅇ 경찰관 상시학습 체제 구축 및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직책과 역할에 상응하는 관리자교육 강화 등 교육개혁을 통해 경찰조직의 전문성 제고

(경찰인력 증원) 선진국 수준에 부족한 인력을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을 증원, ‘학교 · 성폭력 대응’, ‘아동 · 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112센터’ 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

(보수 · 수당 현실화) 경찰의 직무특성을 감안,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여 경찰관들의 자부심과 사기 제고

ㅇ 주요 사건사고가 야간에 집중되는 점, 교대근무로 인한 피로도 등을 고려, 수당 현실화 추진

추진전략 15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91)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92)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93)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94)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95)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96)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97)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91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가. 과제개요

□ 공익침해신고 활성화로 안전·신뢰사회 구축에 기여

○ 민생(식품안전), 불공정(경제적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분야를 법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공익침해 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 강화를 통해 조직내부의 감시와 상호견제를 유도

나. 주요 추진계획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적용법률 추가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 조직내부·주변의 감시와 제보 필요성이 높은 민생 안전 등 관련 법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공익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

○ 공공기관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보호 관련 운영시스템 구축 지속 지원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적용법률 소관부처,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 등)의 신고처리 지원을 위한 정책협의회 활성화, 교육자료 보급 등

○ 자진신고에 대한 책임감면 확대 등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92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가. 과제개요

□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 구현

나. 주요 추진계획

통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

○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 및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유비쿼터스형 국민 중심 안전망 구축

○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형 재난관리체계 구축, 119 영상신고 기능구현 및 GPS 등을 이용한 신고자 위치확인 개선, 현장 중심의 U-안전관리시스템 구현, U-city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국민안전망 구축, 수요자 맞춤형·융합 기상정보서비스 제공,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홍수 산사태 등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 재해예방적 토지이용체계 확립, 도시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 마련, 강우레이더구축, 홍수위험지도 제작, 비탈면 정비, 상습 침수지역 하수관 확충 및 저류시설 설치, 산림재해 안전망 구축

93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가. 과제개요

□ ’17년까지 OECD 수준의 **도로교통안전 확보** 및 **철도항공해양 안전 시스템을 체계화**

나. 주요 추진계획

(**육상교통**)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분석, 우수운수회사 지정 및 CNG버스 내압용기 확대검사 등을 통한 **대형교통사고 예방**

(**교통문화**) **교통안전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수도권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 국민공감형 홍보 등을 통해 **선진교통문화 정착**

(**도로**) 도로안전 **평가기법 개발적용** 및 위험도로 개선, 차량과 차량도로가 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ITS(C-ITS)** 도입

(**철도**) **철도노후 취약시설**을 꾸준히 **개량**하고, 안전대책 추진체계 보강, **안전인증체계 개편과 전문자격제도 확대** 등 추진

(**차량**) 차선유지자동비상 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보급 및 신기술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항공**) 항공안전기술 선진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항공안전관리 체계 확립**

(**해양**) 해양사고율 10% 저감을 목표로 범정부 해상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GPS 교란에 대비한 첨단 대체항법 시스템 구축**

94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가. 과제개요

□ 구미 불산 누출 같은 **화학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석면 등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

ㅇ 장외영향평가제,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피해구제** 체계 마련

나. 주요 추진계획

화학사고 예방·대응·수습 체계 구축

ㅇ 사고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외영향평가**를 도입하고, 화학사고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설치(‘13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

ㅇ **유해물질의 출시 전·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법」을 제정(‘13년)하고 안전표시 등을 선진화(‘14년)

ㅇ 어린이, 노약자 등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을 진단**하며 폐광산 등에 대한 **건강영향을 조사**(‘13~’17년, 114개지역)하고, 환경성질환 연구를 위한 환경보건센터 추가 지정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확립

ㅇ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인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배상제를, 유독물생산자 등에게 **환경오염 피해보험 의무가입제**를 도입하고, 원인자 미상 피해의 구제를 위한 기금을 설치(‘13~’14년 중 법제화)

95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가. 과제개요

□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자력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구현**

나. 주요 추진계획

노후원전(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Stress Test 실시** 등 원전에 대한 엄격한 안전점검 시행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규제**의 **투명성 제고**

○ 일반국민에게 **원전 안전 정보를 전면 공개**하기 위해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제도를 마련·시행

○ 원전 부지별로 '**원전안전 정보공개센터**'를 **설립**하여 원전 정보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상시적 정보소통의 공간으로 활용

원전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원전관리시스템 재정비**

○ 한수원에 추가하여 **부품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도 안전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법령위반 시 제재근거 마련

○ 검사주기 단축(2년→1년), 인력 확대(5명→50명), 검사대상 확대(사업자→부품 공급자) 등 **대폭 강화된 품질검사** 실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역량 확보**

○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을 단계적 확대(현재 선진국 1/2 수준)

○ 전체 원자력 R&D에서 **안전연구 비중**을 5년 내 40%까지 **확대**

정부개편 취지에 맞춰, **원자력안전체계의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 **역량과 기능**을 **세밀하게 설계**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규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체계 완비

○ 안전규제 **홍보 전담기구**를 확대하여 일반 국민, 지역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활동 전개**

96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가. 과제개요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ㅇ 에너지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 **원별 시설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등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나. 주요 추진계획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정비·강화

ㅇ **(공기업 관리감독 강화)** 개별 에너지공기업 내부의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총괄·관리**하는 **"안전관리 위원회"** 설치 운영

ㅇ **(안전 DB구축, 공유) 정비이력 고장사례 복구방법 등을 DB화하고,** 기업간에 공유하여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체계화

ㅇ **(투명성 제고)** 모든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자 취업현황 및 자재 납품과정** 등에서 비리가 발견된 업체 등에 대한 DB 구축, 관리

에너지원별 시설안전관리 강화

ㅇ **(원전)** 안전과 국민신뢰 회복 최우선을 목표로 **원전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15년)하고, 장기가동 설비 선제적 교체, 지역주민 등 **민간감시** 강화로 원전 운영의 투명성 제고

ㅇ **(전기) 노후발전설비 계속운전 기준 마련, 합리적인 예방정비 계획수립·시행** 등 전력설비의 안전성과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강화

ㅇ **(가스)**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독성가스**(독성가스 중화센터 신설 고압가스 차량 관제시스템 구축 등)와 **노후배관 관리**(위험도 평가 도입 등) 강화

ㅇ **(석유)** 환경오염과 화재시 피해최소화를 위해 지하 유류저장시설 오염예방 방안마련 및 저장탱크의 소방시설 작동점검 의무화 등 추진

ㅇ **(광산)** 채굴환경에 적합한 안전시설(통기 배수) 확충, 광산관리 제도 개선, 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로 광산사고 재발을 방지

97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건강 증진

가. 과제개요

□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심 일터 조성**을 통해 산업현장의 재해감소

나. 주요 추진계획

(안전보건관리역량 강화) 소규모 사업장의 직반장을 안전담당자로 지정, 기초적인 안전보건활동 수행 유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

(자율적 재해예방활동 활성화) 위험성평가 강화 및 **산재예방 요율제**(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할인) 도입 등

ㅇ 중대산업사고(화재폭발누출사고 등)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심사대상(5인이상 → 전 사업장) 및 적용 대상물질 확대

(원청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유해위험 관리 강화) 도급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유해·위험설비 관련 작업 도급시 유해·위험정보 제공 의무화, 도급업체의 협력업체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업종 확대(건설·제조업→ 전 업종) 등

(직업병 예방 강화 및 인정기준 개선) 특별관리물질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 표시의 현장 작동성** 강화

ㅇ 새로운 유해요인질병을 반영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정비

추진전략 16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98)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99)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100)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101)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102)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103)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104)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105)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98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가. 과제개요

□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 **환경과 성장이 선순환**되도록 하고 **지구 환경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 수행

나. 주요 추진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

○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시행(2015년) 관련 제도적 기반 및 역량 강화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 제도 운영방안 마련

범지구적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주도적 역할 수행

○ 2020년 이후 기후체제 논의에 대비, 우리의 산업구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여력 등을 감안한 협상전략 수립 및 대응

-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9차, 2013.11, 폴란드 바르샤바) 및 기후변화 정상회의(2014년) 등 국제기후변화 협의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중재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서의 역할 강화

○ 국제기후재원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개도국 지원 장기재원이 GCF(녹색기후기금)를 통해 조성 활용되도록 유도

○ 개도국에 대한 녹색성장 경험전수 및 정책자문 사업 확대 등으로 녹색ODA 비중 확대에 노력

99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가. 과제개요

□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지속가능사회'** 구현

ㅇ 정부, 민간 등 **사회 전 분야의 적응역량 제고**

나. 주요 추진계획

기후변화 감시·예측능력 확보

ㅇ 환경위성체('18년 발사)를 확보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능력을 강화

ㅇ 이상기후 위험요인에 대응한 환경영향평가체계 구축('13년)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 및 생물다양성 관리

ㅇ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기인 건강피해 예방 및 감염성 질병관리를 강화(혹한, 혹서 대비 쉼터 마련, 수인성 질병 모니터링 강화 등)

ㅇ 기후-생태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및 생물자원 조사 발굴, 위해외래종 등 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및 적응대책 수립 지원

ㅇ 개발사업 추진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을 확대하고, 빗물이용 시설, 중수도 등 확대등을 위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ㅇ 민간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적응사업 해외진출 추진

100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가. 과제개요

□ 그간 성장을 뒷받침해온 싸고 좋은 에너지 공급우선 정책은 **전력사용량 급증**, 적정공급시설 적기확보 미흡 등 **수급불안을 초래**

* 전기의 경우 지난 10년간 요금상승이 21%에 그쳐(등유는 139% 상승) 소비가 63% 증가

○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 수급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원활한 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시장 구조 선진화** 추진

나. 주요 추진계획

에너지 수급 안정화 기반 확충

○ **(전력)** 적정 예비율 확보(22%), 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합리적인 전기소비 유도를 위한 요금체계 개편(안) 마련·시행

* 에너지 푸어계층의 요금할인 확대, 주택용 누진제 개편 등 서민과 중산층은 부담은 완화

○ **(석유가스)** 장기도입계약 확대('11년 76% → ' 30년 85%), 원유도입선 다변화, 셰일가스 적기도입('17년), 인수기지 등 공급인프라 확충

○ **(원전)** 안정적인 전력공급, CO_2 감축 등을 위해 불가피한 원전은 안전 최우선으로 운영·관리하고 금년 중 ' 25년 이후 적정규모를 재설정

-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 공론화위원회 를 발족하고(' 13.4월), 논의결과를 토대로 임기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과 착공 추진

(에너지 절약) 캠페인성 절약정책에서 탈피, 절전제품 개발·보급, 에너지절약형 건물 확대, 연비향상 등 시스템형 절약정책 추진

(해외자원개발) **국내도입이 용이한 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자원 파트너쉽 형성에 주력**하며, 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 기술개발, 탐사성공 중심** 자원개발 등 **질적 성장** 추진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전력, 가스시장의 효율화·건실한 수급 시장 구축을 목표로 대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

* (전력) 수급관리체계에 대한 근본 대안마련, (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 등

10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가. 과제개요

□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 수립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 및 제도개선, 산업화를 촉진하는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에 주력

나. 주요 추진계획

(**신재생 중장기 목표 설정**)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13년 수립)에 ' 35년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목표 재설정(현재 ' 30년 비중 목표 11%)

ㅇ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국내잠재량, 입지정보, 시도별 설치가능성 등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 업그레이드

(**신재생 보급제도 혁신 및 시장창출**) 정부의 직접 보조금 투입위주에서 시장창출을 통해 신재생보급 산업화가 촉진되도록 정책 전환

ㅇ (보급사업 개편) 태양광 열 등 원별로 중장기 보급목표를 재수립하고 복잡한 보급프로그램 단순화 등 재정투입의 효율성 제고

ㅇ (규제개선) 신재생 보급을 가로막는 규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보급시장의 병목해소 추진

ㅇ 대규모 해상풍력(서남해안 2.5GW) 프로젝트, 차세대 태양광 등 R&D 투자확대 등을 통해 풍력 태양광 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ㅇ 금년 말까지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국가보급 목표와 산업화 전략을 담은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13~' 35) 수립 및 시행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뒷받침, 전력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국적 스마트그리드 기반을 조기구축

102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가. 과제개요

□ 물, 공기, 대기질 등 **생활환경 취약지역을 없애고, 도시 농촌**의 환경질을 **모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ㅇ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제도를 선진국형으로 혁신하여 환경질 개선은 물론 우수 환경기술시장을 활성화하여 수출산업화, GDP 및 일자리 창출

나. 주요 추진계획

(환경오염시설의 허가제도 선진화) 무기한 허가제를 유기한 재허가제로 전환하고 **최상가용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ly achievable)을 적용한 경우에만 재허가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 **영농폐기물** 수거체계 확립으로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정수장 고도화** 및 **수도관 정비**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녹조 발생 원인물질 적극 감축 등으로 **수질오염을 저감**하는 한편, 오염사고예방을 위해 **완충저류시설 확대 설치**

오염·훼손 **하천의 수생태계**(하천 1,667km), 백두대간, DMZ 등을 복원하여 **한반도 핵심 생태축을 보전**

(대기질 개선) 도시·공단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강화** ('13년~)하고, **전기차·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

폐기물이 비산·유출되는 전근대적 **수거차량을** Tank Lorry**형**으로 **현대화**

103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가. 과제개요

□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유도하고, **국토 ·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창조

○ 외곽 확장보다는 **도시재생**으로 국토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공간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인 국토계획 수립 지원

나. 주요 추진계획

(과잉 · 난개발 차단)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 사업 **평가 관리시스템** 구축, **국토 · 환경계획 연동제** 등 제도개선 추진

○ **성장관리방안 도입,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 등을 통해 개발 압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각종 **평가 · 협의의 통합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수렴 내실화**

(도시재생) 신규 개발에 따른 녹지훼손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사회 · 물리적 자산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

○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투자**

(공간 빅데이터체계 구축) 국가공간정보 플랫폼에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국토계획 수립 지원

104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가. 과제개요

□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그간 **방치된 해양 공간의 이용활용**을 **제고**

나. 주요 추진계획

(특별관리해역 관리강화) 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강화하고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

(해양정화 및 보호) 오염퇴적물 정화 등 해양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

(연안유휴지 휴양시설 조성) **국가소유 연안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체육시설, 친수공간, 텐트촌** 등 휴양시설 조성

○ 전국 **무인도서별로 개발·보존 필요성 등에 따라 관리유형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

(연안침식관리 및 대응) 연안침식 가속화 문제 해소를 위해 **'연안침식 관리구역제'를 도입**하고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 추진**

* 연안침식 모니터링 대상지역 확대 및 자연친화적 침식대응 기술 R&D 추진

(연안보호 강화) 환경이 우수한 자연해안선 보전을 위해 **연안지역 토지매입, 바닷가 연안완충구역 지정** 등 제도개선 추진

105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가. 과제개요

□ 자원·에너지 선순환 제도화로 지속가능발전 조기 실현

ㅇ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채취·사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한번 채취한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순환사용이 극대화**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조기실현

나. 주요 추진계획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 **자원순환사회전환 촉진법** 을 제정(‘14년)하여 **자원순환률 목표제**를 도입, 채취한 자연자원·에너지의 선순환사회를 구축

ㅇ 수거체계 개선 등으로 **폐전자제품 재활용을 대폭 확대**(‘12년 3kg/인→‘17년 4.5kg/인) 하고, 폐자동차 재활용 촉진 및 폐냉매 적정처리를 위한 **폐자동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13년)

ㅇ **폐자원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믿고 사고 팔수 있는 **‘순환자원거래소’**의 단계적 구축·운영, 안정적 원료공급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17년까지 7개소)

(미처리 폐기물 매립 제로화 추진) 매립·소각비용이 재활용 비용을 상회하게 하여 재자원화를 유도하는 **폐기물 매립·소각 처리부담제**를 도입(‘14년)

* 덴마크(’87년), 프랑스(’93년), 영국(’96년), 일본(’00년) 등에서 동 제도를 도입한 결과 생활폐기물의 무처리 매립 제로화가 사실상 실현

ㅇ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시설확충으로 에너지 자립에 기여(‘20년기준 원유5,700만배럴 대체)하고, 온실가스도 감축(온실가스 2,800만톤 감축)

추진전략 17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106)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107)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108)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109)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 강화

(110) 사회 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1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106	과거와의 화해를 위한 과거사 명예회복

가. 과제개요

□ 부마민주항쟁 및 대통령 긴급조치(1,4,7,9호) 위반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나. 주요 추진 계획

부마 민주항쟁 명예회복 추진

○ 부마민주항쟁법 제정 및 시행령 제정

- 관련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재단설립 근거 등 규정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추진

○ 긴급조치관련법 제정 및 시행령 제정

- 긴급조치 피해 관련자 명예회복 근거 규정

107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가. 과제개요

□ 계층, 지역,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 촉진

나. 주요 추진 계획

직무능력 중심 공직사회 구현

○ 공직에 적합한 "직급별 직무능력 표준"을 개발하고 평가기법과 전문인력 육성, 과장직위 진입 시에도 고위공무원과 같이 역량평가 의무화,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시 부적격 기준 강화,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보직관리 개선

공직내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17년까지 15%로 확대, 과장급 직위에 여성이 없는 부처는 '13년중 1명 이상 임용, 각 부처 목표달성도를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반영

고졸지역인재·장애인 채용 확대

○ 고졸 지역 인재 추천채용 규모를 '13년 120명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 대졸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17년까지 120명으로 단계적 확대, 중증장애인 채용직위 적극 발굴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108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가. 과제개요

□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통한 **노사관계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나. 주요 추진계획

(사회적 대타협 등) 참여주체 확대, 논의의제 다양화 등 **노사정 위원회 개편**을 통한 실질적 사회적 대화 국민기구로의 정착 지원

○ **중앙 및 지방단위 노사정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고, 산업현장 단위 노사협의회의 적극적 역할 수행 지원

○ **범 국민적 참여**와 역량 결집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 추진**

(신뢰와 상생의 노사관계 전환) 노사문제는 **법 · 질서 준수 , 신뢰와 타협** 가치를 존중하면서 노사 자율 해결기조를 실천

○ **전근대적이고 불합리 · 불법행위 근절** 및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 사회적 책임 실천 **우수노사 발굴 및 모범사례** 확산

* 복수노조와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상황 평가 및 필요시 노사정간 합리적 보완방안 등 논의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현행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 판정 등 기능 강화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노동분쟁 해결** 지원

○ 판정 · 조정의 전문성 신뢰도 및 서비스 수준 제고

* 상임위원 보강 및 현장방문을 통한 순회심판 · 조정 제도 도입, 참여위원의 행위규범 강화 및 회피제도 도입, 사건배정시스템 개선 등 운영체제 개선

109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가. 과제개요

□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참여적 갈등예방·관리**에 대한 **부처의 인식 및 역량 제고**

나. 주요 추진계획

공공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각 부처**별로 외부전문가 중심의 **갈등관리 심의회 구성·운영**

○ 총리실은 각 부처 갈등관리를 수시 점검·평가

중요 갈등현안의 집중 관리 및 조기 해소

○ 중요 갈등현안 선정후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집중관리

○ 주요 공공갈등과제 관리방안 마련 등 부처 갈등현안 관리 강화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관련 정책법령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갈등관리 연구기관 지정 운영

○ 부처·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교육 및 현장 갈등당사자 중심의 합동세미나 실시

○ 주요 갈등현황, 사례, 전문가 및 관련단체, 연구자료, 해외사례 등의 갈등관리 종합DB 구축·운영

110	사회통합적 인권 보호체계 구축

가. 과제개요

□ 3불 시대(불안, 불만, 불신)의 젊은 세대,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통해 사회대통합과 인권선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확립

ㅇ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점검을 내실화하고, 그 추진체계를 강화

ㅇ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히 취약계층인 시설수용자에 대한 인신보호 강화

나. 주요 추진계획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강화) 가칭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으로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법제화하여 인권에 관한 시스템 강화

ㅇ 새 정부의 주요 인권정책 과제를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12-'16)에 반영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하여 기본계획의 이행에 관한 실질적 점검 및 분석 추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인신보호법을 개정하여, 정신보건시설 수용자 등의 위법 수용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 청구 단계부터 지원대리할 수 있는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111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가. 과제개요

□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급 등 스펙보다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나. 주요 추진계획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통해 **열정잠재력을 지닌 청년을 선발, 멘토의 도제식 멘토링** 및 **청년인재은행 DB 등록** 등을 통한 취업 지원

* 공공기관 중심으로 선도, 모범사례 발굴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확산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협업형 개발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직무능력표준 조기 개발**('13 ~'14년)

○ **교육훈련과정 및 자격시험 출제기준 개편,** 일-교육훈련-자격 이 연계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 장기적으로 자격과 학위, 교육·훈련, 직무경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국가직업자격체계(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구축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신규채용시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직무역량평가 모델 개발보급**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현장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개편 및 **재직근로자의 일학습 병행 지원** 기반 조성

○ **생애주기별 숙련향상 지원 및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 1:1 멘토링 등에 기반한 「숙련진단-맞춤형 직업능력개발-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관련 추진체계 구축*

○ 중앙·권역별 **인력·숙련수요 전망**을 토대로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인력양성사업을 통합지원**

추진전략 18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112)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113) 지방대학 지원 확대

(114)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115)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116)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112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가. 과제개요

□ **도시권 중심의 지역발전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여 **국토균형발전 도모**

ㅇ 산업기능 중심의 기존 지역정책을 보완하여 **경제권과 도시생활권을 연계**하는 **주민체감형 국토발전정책** 추진

나. 주요 추진계획

(지방거점도시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 10+α 중추도시권에 도시규모특성 등을 고려한 **도시권별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

ㅇ 도시권 육성을 위하여 **맞춤형 도시재생, 신성장동력 발굴, 국민행복 생활인프라** 등 핵심 프로젝트 발굴지원

(세종시 조성) 세종시 기반시설을 적기에 조성하고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및 **과학벨트 연계발전** 등 추진

(산업단지) 지역 **특화산단**을 개발하고, **노후산단 재생** 추진

ㅇ 식품, 항공 등 **지방 중소특화산단**을 개발하고 기반시설 지원

ㅇ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개선** 등 **재생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행복한 산단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업종재편

(동서통합지대 조성) **섬진강 인근**에 영호남간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 등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성장거점 육성**

지역발전위원회 역할 강화 등 **지역 개발 추진체계 개편**

113	지방대학 지원 확대

가. 과제개요

□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원 확대, 지방 대학생 채용할당제**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나. 주요 추진계획

(지방거점대학 육성)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

ㅇ 지역대학이 소재 지역의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되도록 **'(가칭)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추진**

ㅇ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을 통해 현장적합성 높은 **인력양성, 대학 특성화** 및 **지역산업과의 동반성장 견인**

ㅇ **지방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및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사업 개선**을 통해 **학부·학과 특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원비율 확대**

ㅇ 대학 평가시 **지역·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컨설팅 방식을 개선하여 지역대학 특성화와 구조개선 촉진

(지방대학 특성화 촉진) 지방대학의 강점분야 및 지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부·학과특성화에 집중 투자**

ㅇ 지방대학의 경쟁력있는 단과대학, 학부, 학과 특성화를 집중 지원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114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가. 과제개요

□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 강화

나. 주요 추진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

○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이전재원을 축소해 재정자립도를 높임

○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 비과세 감면 축소, 체납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 보통교부세 산정시 지역발전 정도 등에 따라 수입산정 차등화,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와 통합하고 현 사업 대부분은 지방사무로 전환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 지방채무 및 지출관리 강화, 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산출, 중앙 투융자 사전심사대상 확대, 재정공시 확대 및 사업별 원가정보 공개, 입찰계약 전 과정 공개 의무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

115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 · 지역공동체 활성화

가. 과제개요

□ 지방이 진정한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되는 국정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 및 상생협력 체계 구축

ㅇ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시민사회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구축

나. 주요 추진 계획

지방분권 강화

ㅇ 지방분권 추진체계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 국가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13)
- 주요정책에 대한 중앙-지방간 충분한 협의 및 상호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제도화

시민사회 · 지역공동체 활성화

ㅇ 정부-시민단체간 협력 강화, 주민자치회 중심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의 내실화, 시민단체의 자생력 강화 및 나눔활동 활성화

116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가. 과제개요

□ 지역사업 지원의 **비효율성과 복잡한 사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 인재의 수도권 집중 등 불균형 현상을 지속 완화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력 제고**

○ 지역사업구조 단순화, 지역 자율성과 연계성 강화, 행복산업단지 조성사업 확산 및 지역특구제도의 내실화 추진

나. 주요 추진계획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재정비) 기존 지역사업을 **일자리 지역유망기업 지원중심으로 재편***하며, **지역인재 양성 활성화**

* 광역선도사업은 지역간연계협력 중심으로, 신특화사업은 시도주도 기업생태계 지원사업으로 발전

(지역투자여건 개선) 정부-지자체-기업간 투자 협약 도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개편**(' 13.1분기) 및 **지역별 '투자애로타개회의'** 를 통해 지역경제 및 일자리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 지원

(지자체의 자율성과 연계성 확대) 지자체별 발전계획 수립 **사업집행의 자율성 책임성을 확대**

○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중기청이 지역일자리창출의 중심**이 되도록 하며, 시도별 테크노파크와 혁신도시 등 **성장거점 조성사업간 연계협력도 강화**

(지역특구제도 정비) 각종 특구의 **신규지정은 신중히 검토**하고 **중복 지정된 지역의 구조조정, 인센티브 차별화** 등으로 **특구제도 내실화 추진**('13년중 연구용역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방안 마련)

국정목표 5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추진전략 19 ····· 179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추진전략 20 ····· 189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추진전략 21 ····· 195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추진전략 19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117)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118)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119) 한미군사동맹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120)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121) 보람있는 군복무 및 국민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122) 명예로운 보훈

(123)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117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가. 과제개요

□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태세와 능력을 갖춤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나. 주요 추진계획

(완벽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구축) 완벽한 국지전 및 전면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적 도발대비 계획 및 위기관리 수행체계를 발전시키며, 적 도발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도발시 단호한 응징 및 추가도발 의지를 분쇄

(능동적 억제전략을 통한 적극방위능력 확보)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 핵·미사일 시설 타격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

(민·관·군·경 통합방위 및 테러대비태세 강화) 정부와 지자체의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조직을 강화하고, 민·관·군·경 단일화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

(군 정신전력 강화) 군의 확고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신전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관 육성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신세대 장병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확대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북한군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국가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대응체계를 발전시키며, 사이버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등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확충

(국가·국방 위기관리태세 강화)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연계한 국방위기관리태세를 확립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네트워킹과 민간 협력체제를 구축

118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가. 과제개요

□ 전략환경 변화와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 가능한 전방위 대비 방위역량을 구축하여 주권·안보를 수호하고 평화·안정을 보장

나. 주요 추진계획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 향후 5년간 추진할 국방개혁과제를 조기에 식별하여 추진하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군사전략과 전작권 전환 및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보완을 고려하여 군구조 개편계획을 발전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안보에 대한 새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

(국방획득체계 개선) 방위사업청의 일부 기능(정책, 계획수립, 평가 등)을 국방부로 이관하여 방위사업청은 집행기능을 전담토록하고, ADD·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부 관리 강화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차기전투기 확보 등 주요 핵심전력 사업이 적기에 전력화 되도록 추진하고, 제주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적기에 완료

(맞춤형 확장억제능력 강화) 확장억제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북핵위협 대비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한반도 전략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 개발 및 연습 강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비 타격능력 증강 및 한국형 방어체계 구축)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 따라 미사일 능력을 확충하면서, 실질적인 타격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Kill Chain을 구축하고, 적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발전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 '국가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우주전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전문 인력관리체계 정립 등 국방우주력 운영체계 발전

(감시·정찰 능력 단계적 확대) 군 정찰위성 및 중·고고도 UAV 전력화로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제대별 정보조직 창설 및 자산을 확보하며, 정보 전문인력 확충 및 전술제대 정보능력을 보강

119	한미군사동맹의 지속적 발전 및 주변국 국방협력 강화

가. 과제개요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 안보에 유리한 전략환경 조성 및 국가간 갈등 예방

나. 주요 추진계획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한미동맹 국방비전 2030'을 발전시키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한미간 정례협의체를 지속 발전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 및 연합방위체제 구축)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하여 식별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군 주도의 단일 전구사령부 구성 및 연합전투참모단을 운영

(주변국들과 양자·다자 국방협력 강화) 주변국(일·중·러)과 이미 구축된 교류협력 채널을 활성화하고,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 수행

(국제평화유지 활동 발전) 다국적 평화활동·군사교류협력 파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평화유지군 참여를 확대

(서울안보대화 확대·발전) 현재 참가중인 15개국·2개 국제기구를 23개국·3개 국제기구로 확대하고, 각국 고위급 대표 및 저명한 민간 안보전문가 참가를 통해 다자간 안보대화체로서의 위상을 확보

120	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가. 과제개요

□ 국방경영의 효율화 및 군의 전투임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방위산업의 창조경제 전략산업화 달성

나. 주요 추진계획

(미래지향적 국방경영 혁신의 지속 추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기획 평가단'을 상시 운영하고, KIDA '경상사업 분석단(가칭)'을 활용하여 예산 전 과정의 합리성을 제고

(전투근무지원 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 민간자원을 활용한 전투근무지원 분야 전담관리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민간자원 활용을 통해 절감한 군 인력을 전투부대에 재배치

(선진 국방정보화 환경 구축 및 발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국방통합정보관리소'를 구축하고, 합동전력 복합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인증체계를 시행하며, IT 신기술의 적기 도입을 위한 민·관·군 협력을 강화

(창조형 R&D 추진 및 방위산업 활성화) 국방 R&D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ADD를 세계적인 국방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육성하며, 무인·로봇 등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투자 확대, 국방획득체계 개선과 연계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방산수출 인프라 확대를 추진

121	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

가. 과제개요

□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고,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며, 국방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상 구현

나. 주요 추진계획

(병 봉급 인상 및 장병복지 획기적 증진) 병 봉급 인상, 장병 의식주 개선, 문화시설 확충, 의료지원체계 개선 등 장병 복지 및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향상.

(생산적 군 복무 및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보상 확대) 원격강좌 참여대학을 확대하고, 학점취득 상한 확대를 위한 관련법령을 개정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공무수행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확대

(우수인력 획득 및 간부 위상 제고를 통한 복무의욕 고취)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비율 확대와 직업군인의 정년연장 검토, 부사관 학군단 신설 및 부사관 위상 제고 등을 통한 우수인력 획득 및 복무의욕 고취

(병 복무기간 단축)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사회적 관심자원의 병역을 집중 관리) 병역사항 집중관리를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및 D/B를 구축하며, 업무수행을 위한 직제를 편성

(민·군 상생 개념의 국방 규제 개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군 소음 대책법」 및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법령에 따라 이전·소음대책사업을 추진

122	명예로운 보훈

가. 과제개요

□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명예로운 사회 달성

나. 주요 추진계획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 보상과 복지강화

○ 참전명예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과 연동하여 인상 추진

국가유공자 의료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점진적 확대 : 인천보훈병원 추진 검토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지원조직 확대

○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원조직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대군인 인력개발원을 설립하여 제대군인지원센터 기능 흡수 및 통합

○ 범정부적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조시스템 구축

정전 60주년 국제적 기념사업

○ 정전 협정(7.27) 60주년 행사를 UN참전 21개국 정부대표 초청 등 정부 주관의 국제적 행사로 추진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6·25 전사자 유해발굴 확대

예비군훈련 수당의 현실화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123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가. 과제개요

□ 북한 핵실험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함께 남북간 협의 및 미국·중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과 조율을 거쳐 큰 틀에서 비핵화 해결 모색

나. 주요 추진계획

북핵 실험 대응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

○ 북한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대응 과정에서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안보리 결의 등 북한의 국제의무 준수를 위해 국제 사회와 공조 강화

비핵화 프로세스 재개 여건 조성

○ 미·중 등 관련국과의 조율을 거쳐 비핵화 협상 여건 조성 추진

남북간 협의 추진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실질적 협의 추진을 통해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에 동력 주입

한미중 3자 전략대화 단계적 가동 및 국제사회와 협력 확대

○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단계적으로 가동하여 3국간 신뢰구축이 북핵 문제 해결에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유엔, EU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

6자회담 재개 및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

추진전략 20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12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125)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126)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12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가. 과제개요

□ 남북간 신뢰형성을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발전

ㅇ 단기적으로 억지와 안보를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나. 주요 추진계획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대북정책이지 단순한 유화정책이 아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만 원활히 가동될 수 있음.(2.13, 당선인 말씀)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UN제재 대상)은 정치 안보 상황과 구분하여 국제기구와 협의하에 시기 및 방식 검토

ㅇ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도 노력

(대화채널 개설 및 기존 합의정신 실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제정세,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서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 핵문제 등 현안 문제 해결 추진

ㅇ 남북간 합의는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견지, 추가 합의는 합의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진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북핵상황 진전 등을 고려하면서, 개성공단 국제화, 경제 사회문화 교류 내실화 모색

ㅇ 서울 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문제는 여건을 감안 검토

* 남북간 신뢰와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교류협력의 상호 보완적 발전) 도발 중지 등 기본적 조치부터 시작,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진전을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있게 추진

125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가. 과제개요

□ 통일비전을 재정립하고, 경제 환경 공동체 등을 추진함으로써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

나. 주요 추진계획

(그린 데탕트 를 통한 환경공동체 건설) 북핵 상황 진전을 감안하면서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 추진

ㅇ 녹색 경제협력, 접경지역 DMZ 백두산 화산 등 분야별 공동 연구, 개성공단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모색

(북한 인권 개선 등을 통한 '행복한 통일' 여건 조성) 북한 인권법 제정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대내외 환경 조성

ㅇ 민간단체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하여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인도주의적 협력 모색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남북간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등을 통한 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ㅇ 중장기적으로 철도 도로, 전력, 통신 등 산업인프라 단계적 연결을 포함해서 검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 발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 및 발전방향 공론화

ㅇ 학술연구,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발전 방안 검토

126	통일 대비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준비

가. 과제개요

□ 국내외 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준비 역량 강화

ㅇ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국론 통합 및 국제적 지지 확보

ㅇ 인적 물적 제도적 역량을 확충, 통일준비 내실화

나. 주요 추진계획

(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 발전) 탈북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의료 지원 강화

ㅇ 탈북민 재교육 확대, 젊은 세대 대상 집중적 교육지원으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통일 미래의 역군으로 육성

ㅇ 탈북민 문화센터 건립, 탈북민간 소통의 허브로 활용

(실질적 통일 준비 역량 강화) 유관기관간 통일대비 협조체계 강화

ㅇ 통일재원 마련 법제화 적극 검토

ㅇ 국내외 통일 북한 관련 연구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균형있는 교육 컨텐츠 개발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주변국을 대상으로 정부 민간이 협력하는 '1.5 트랙 협의체'를 구축 운영

ㅇ 재외동포 대상으로 한민족 통일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추진전략 21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127)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128) 한미동맹과 한중동반자 관계의 조화 발전 및 한일 관계 안정화

(129)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 협력 강화

(130)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131)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와 공공외교 일자리 외교 확대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133)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 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127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가. 과제개요

□ 동북아 양자 갈등구조를 다자간 상호협력의 틀로 완화, 유라시아 협력과 연동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신뢰구축 및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

나. 주요 추진계획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 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신뢰구축 및 새로운 질서 창출

ㅇ △테러・마약 △에너지・물류・환경 △인도주의・재난대응 등 협력이 용이한 비전통적 안보 분야부터 추진

ㅇ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의’ 개최 추진

- 초기에는 기존 다자회의 계기에 개최하고, 참가국간 신뢰구축 정도에 따라 별도 회의를 개최하는 등 동북아 평화협력 제도화 추진

(북방 3각협력 추진) 남북러 및 남북중 3각 협력 추진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과 유라시아 외교 추진에 추동력 확보

(유라시아 3각협력 추진) ASEAN(남아시아 포함) 및 EU(중앙아 포함)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유라시아 3각협력 구도 강화

ㅇ △한EU 정례 정상회담, △한・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외교장관회의, △한-중앙아 협력 포럼 활성화 및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등 추진

128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 · 발전 및 한일관계 안정화

가. 과제개요

□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며, 한일관계의 안정화 추진

나. 주요 추진계획

한미간 현안 해결

ㅇ 한미원자력 협력 협정,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등 한미간 당면 현안의 원만한 해결

한미 동맹 심화 발전

ㅇ 한미동맹 60주년(2013년)을 계기로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ㅇ 한중 경제관계 발전에 상응하는 정치안보 협력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한중 민간차원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

한미중 3자 전략대화의 단계적 가동

ㅇ 기존 민간/민관 대화체를 통한 협력 축적 후 정부간 대화체로 격상

한일관계 안정화

ㅇ 영토 문제는 역사 문제 차원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하되,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

129	신흥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산업자원협력 강화

가. 과제개요

□ BRICs 등 **신흥국 대형 프로젝트 시장 선점**과 새로운 수출 동력화를 위해 정부산업간 협력 및 효율적 수주지원체제 구축

* '17년까지 전세계 시스템재 프로젝트 시장 약 10%(1,300억불) 점유 추진

나. 주요 추진계획

(산업개발경험 전수) 베트남, UAE, 모잠비크 등 **플랜트원전 자원개발 유망국**에 산업에너지자원 기술 등을 이전하기 위한 **현지기술센터 구축, 퇴직전문가 파견, 적정기술보급 등** 추진

* ISP(Industrial capability Sharing Program): 신흥국의 자생적 산업발전 역량구축 지원

(프로젝트 수주 주기별 지원 체계화) 사업기획 및 타당성검토(F/S) 지원확대, 전략국가별 친한 유력인사 DB 구축 및 정상간 경제외교 지속

ㅇ 산업자원협력위(총 66개) 등 정부간 협력채널 운영 및 대형 프로젝트 독점권 확보를 위해 정부간협정(IGA) 체결

ㅇ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취약한 프로젝트 기획·개발 및 금융조달능력 적극 보완

(프로젝트 금융 애로해소) 해외 유망프로젝트 대상으로 중동·싱가폴 등의 국부펀드와 연계한 투자자금 조달지원 추진

* 투자설명회, 자원통상협력, 패키지지원 및 기술지원 제안 등

ㅇ 세계은행(WB) 등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강화

130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 실현

가. 과제개요

□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 기여,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내실화,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등을 통해 책임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 정립

나. 주요 추진계획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 적극 기여) G20, APEC, OECD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기여하고, 개발녹색성장 등 우리 주도 의제 관련 중견국간 협력 선도

ㅇ GCF 사무국 유치 후속조치, GGGI 및 GTC와의 협력주도 등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문제 등 해결에 선도적 역할 수행

ㅇ 개도국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 확대)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2013-14년)을 계기로 UN PKO 기여 확대, 핵안보인권사이버범죄 대응 등 세계평화와 글로벌 문제 해결에 적극 기여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국제기구내 우리 국민 진출 증대,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적기여 증대

131	재외국민 안전 · 권익 보호와 공공외교 · 일자리 외교 확대

가. 과제개요

□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 국민의 참여와 창안 통한 공공외교 강화 및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 외교 추진

나. 주요 추진계획

(재외국민 안전과 권익보호 강화 및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국민행복 영사서비스’ 프로젝트 가동을 통한 양질의 영사서비스 제공 및700만 재외동포 역량 결집을 위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 EBS와 협조하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한글교육 및 우리 역사·문화 교육의 혁신적 개선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추진) 일관된 전략하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외교를 추진하여 우리의 경험문화지식을 체계적 전파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 추진)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를 통한 젊은 세대의 해외진출 적극 확대

○ 젊은이들이 직접 개발협력에 참여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훈련을 체계화하고 파견 확대

○ 지자체, 지방대 등과 협력, 상대적 소외계층, 젊은 지방인재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교육 체계 확충

○ 청년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개도국 문화꿈나무, 청년공공외교단 등을 통해 매력한국 전파

132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 강화

가. 과제개요

□ 동아시아 역내국가 및 신흥 시장국과의 FTA 네트워크 구축,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

나. 주요 추진계획

(FTA 네트워크) 동아시아 역내통합을 주도하고, 주요 전략국 및 자원 부국과의 FTA 추진으로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

○ 한중일 3국의 산업구조, 동태적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한중 및 한중일 FTA를 추진**하되,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민감 분야를 보호**

○ RCEP(역내 포괄적 경제협정) 등 **다자간 지역경제통합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TPP(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 등 아태 경제통합 논의도 면밀하게 검토

* RCEP 참여국 : ASEAN(주도) + 6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 TPP : 미국(주도)포함, 환태평양 11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등) 참여

○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등 주요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동 등 **자원부국과의 FTA 추진 여건 조성**

(신흥국 경제협력) 중동·동남아·중남미 등 신흥경제권별로 경제협력목표와 중점협력국가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협력 추진

○ 중동의 **신산업·인프라 프로젝트** 및 이라크·리비아 등 **재건 프로젝트 적극 진출**

○ KSP(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 등을 활용하여 멕시코, 브라질, 미얀마 등 핵심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

○ '13년 북극이사회 옵저버 진출을 통해 **북극항로 개발 참여**

133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 추진

가. 과제개요

□ ODA 규모 지속 확대 및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원국(　　)의 **자립역량 배양 및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

나. 주요 추진계획

(ODA 규모 지속 확대)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25%를 목표로 추진하고, 2016년 이후 규모 등을 포함한「제2차 ODA 기본계획(2016~2020)」수립

(ODA 통합 추진체계 공고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의 통합적 추진체계 및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수원국 중심의 효율적 ODA 추진방식 확립) 중점협력국 조정 및 국가협력전략 수립개선을 통해 ODA 재원역량을 집중

(개발협력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봉사단·ODA 청년인턴 사업·주니어 컨설턴트 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ODA 교육 확대

(ODA 투명성 및 소통 강화로 국민신뢰 및 지지 확대) ODA 정보제공 확대, 시민사회와의 정책대화 등 소통 활성화

추진 기반
- 신뢰받는 정부

추진전략 1 207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

추진전략 2 213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추진전략 1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 3.0 달성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135) 세종시 조기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136)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

134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가. 과제개요

□ 개방공유 및 협업·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 실현

나. 주요 추진 계획

공공정보 개방공유 확대 및 민관 협치 강화

○ 공공기관 정보 공개 확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정보 개방 및 이용 활성화(공공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미래전략 및 위기대응전략 수립

소통협업을 통한 부처간 칸막이 제거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및 융합행정 활성화, 범정부 지식경영 시스템 구축

개인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행정서비스를 수혜자 유형기준으로 재분류한 '행정서비스맵' 제작, 생애주기별수혜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정부3.0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직문화 창달

○ 인사교류 확대 및 소통협업 확대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스마트 행정효율성 관리지표 개발운영 등 성과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으로 디지털 협업문화 확산

135	세종시 조기 정착을 통한 정부효율 극대화

가. 과제개요

□ 정부통합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부처내부처간 **협업 활성화** 및 세종시 **이전공무원의 정착 지원과 도시자족기능 확충**

나. 주요 추진계획

정부내 협업시스템 강화

ㅇ 부처 예산요구 및 법제심사 시 협업체계 구축여부 심사, 정부업무평가시 부처간 협업체제 구축 및 운영여부 등을 평가

ㅇ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및 결재메일업무포털 등 모바일서비스 확대

ㅇ 세종시지원위원회를 통한 각 부처 이행상황 지속 점검관리, 디지털 협업시스템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ㅇ 국회와 협의하여 행정부 공무원을 위한 국회내 사무공간 확충 및 대국회 업무의 운영 효율화 추진

세종시 정주환경 개선

ㅇ 주택 특별공급 지속 추진, 임대주택 확보 추진

ㅇ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편의 제고, 광역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지속 개선, 교통수단간 체계적 환승시스템 조기 구축

ㅇ IT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학교 조성, 중대형병원 조기 유치 방안 강구

ㅇ 생활편의시설 입점 및 문화시설 적극 유치

136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등 합리화

가. 과제개요

□ 공공기관의 임원인사제도, 경영평가제도, 재무건전성 등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

나. 주요 추진계획

(인사제도 개선)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ㅇ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주무부처 공공기관 경영진 임명권자의 간섭 배제

ㅇ 기관장, 감사 등 임원직위별 자격기준의 구체화로 낙하산 인사논란 불식 및 임원 임기 개선

(경영평가제도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 강화**

ㅇ 기관장 경영계약제의 계약 내용을 구체화계량화하여 **경영성과협약제**로 발전시키고, 경영성과협약은 **3년 단위로 평가**하여 연임여부 등에 반영

(재정투명성 강화)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및 사후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

ㅇ 부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별 구분회계 제도 도입** 방안 시범실시

ㅇ 현행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제도 수준으로 내실화하는 한편,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성과를 참고하여 **사후 심층평가제도 도입** 추진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

가. 과제개요

□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 불합리한 규제의 도입 억제 등을 통해 부적절한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의 품질을 향상

나. 주요 추진계획

불합리한 규제 생성을 시스템적으로 억제

○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 형평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규제의 합리적 신설을 유도

* 동일 규제준수비용이라도 중소기업의 체감부담이 대기업보다 큰 점 고려

○ 규제심사 매뉴얼을 개정하여 각 부처에 설치된 자체규제개혁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

핵심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국정운영방향에 부합하도록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 안전사회 조성 및 국민불편 해소 등의 중점 추진분야를 두고 개선대상 과제 적극 발굴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규제개혁 관련기관들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운영실태와 업무성과를 수시로 점검지원

추진전략 2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

(138)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139)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140)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138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가. 과제개요

□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부정부패 근절** 및 부당한 알선 청탁, 금품수수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타파**

ㅇ **공직기강 관련기관간** 칸막이 제거 및 **효율적인 공조체제 구축**

나. 주요 추진계획

특별감찰관제 도입

ㅇ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 신설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 의 제정 추진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익추구 금지

ㅇ 재산등록 대상자 확대 등 공직자재산등록제도 보완,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

ㅇ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및 원문공개 등 추진,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있는 직무수행 금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건설하도급 등 구조적반복적 비리 분야에 대한 기획점검 강화, 부처기관 스스로 관행적 비리를 발굴개선토록 유도

부패방지기관간 협업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ㅇ 감사원 등 공직부패방지 관련기관간 역할분담 강화, 교차감사 및 합동감사 확대 실시로 감사중복 최소화

자체감사기구 운영 내실화

ㅇ 자체감사 책임자의 자격요건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책임자 임명시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는 방안 도입

139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가. 과제개요

□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실히 보장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제도 정비

나. 주요 추진계획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충실하게 보장되도록 인사제도 개선

ㅇ 검사장급 보직의 적정 규모, 감축 필요성 등을 분석하여 보직 감축 추진

ㅇ 부장검사 승진심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하는 등 검찰인사위원회 운영 실질화

ㅇ 인력과 조직 진단을 통해,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추진

(감찰 징계 및 적격심사 강화) 내부비리 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청렴성 제고 추진

ㅇ 감찰 조직과 인력 대폭 확충, 징계절차 간소화 징계 수위 강화 등 징계제도 개선 및 감찰 직원의 외부채용 방안 검토

ㅇ 검사적격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부적격 검사 조기 퇴출

(검찰 권한 재편)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효율성 및 민주적 정당성 강화

ㅇ 대검 중수부 폐지와 함께 일선 부정부패 수사활동을 총괄, 지휘 및 지원하는 부서 신설, 부정부패 수사 공백을 방지

ㅇ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준하는 위원 구성 및 중요사건에 대한 의무적 심의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화 검토

(검경의 합리적 역할 정립)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

140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가. 과제개요

□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도록 세제 · 세정을 운영하여 **직접적 증세없이 복지재원의 조달과 조세정의 확립**

나. 주요 추진계획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국세청에 T/F를 구성하여 **핵심 추진과제 선정,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수립 집행**

○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거래,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강화

(과세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를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징수에 활용 · 강화

○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적격증빙 검증 시스템 구축 등 **실물거래 과세인프라의 개선**

○ 블랙마켓 단속 강화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행위 **단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조세지원제도 재편) 도입취지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감면제도를 **소득공제 중심에서 세액공제 방식을 확대**

○ **장애인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지원세제 개선추진**

○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23차 협력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추가 세제지원 방안 마련